민심이
중심이 되는 나라

# 진짜민심은 여기!

**3대 분야**
**173개 실천과제**

## 희망을 잇다!

### 가계경제


유류세 인하 ..... 21
버스, 지하철 통합 월정기권 교통카드 도입 ..... 22
알뜰폰 활성화 ..... 23
공짜 데이터 스폰서 요금제 확대 ..... 24
가계의 금융 부담 대폭 낮추기 ..... 25
예금자 보호한도 7,000만원으로 확대 ..... 26
납부한 고용보험의 20% 환급으로 퇴직자 지원 ..... 27
청년・어르신 연금 사각지대 해소 ..... 28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 29
자살이력 가정, 재산 / 소득 상관없이 위기가정 지정 ..... 30


### 주거복지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로 서민 주거 환경 개선 ..... 33
노후아파트 재건축 요건 합리화로 주택공급확대 ..... 34
깡통전세피해 방지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인하 ..... 35
주차공간 공유하기로 주차난 해소 ..... 36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스마트시티」와「스마트타운」육성 ..... 37


### 노동복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39
저소득층과 청년도 취업 수당 지급 ..... 40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 4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 42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원스톱 일자리 지원 서비스 구축 ..... 43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시스템 마련 ..... 44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지정휴가제 도입 ..... 45

민심이
중심이 되는 나라

# 진짜민심은 여기!

**3대 분야**
**173개 실천과제**

## 희망을 잇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 4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 48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49
임차인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50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지원 ..... 51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강화 ..... 52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 조속 추진 ..... 53
대리운전 표준요금제 도입 ..... 54
강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 55


### 농축산어업인


농어업재해보험료 국비지원 70%로 확대 ..... 57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 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 ..... 58
농약 살포용 드론 무료 보급 ..... 59
농어촌 1,000원 택시 및 농어촌 교통할인권 추진 ..... 60
“함께 한밥상”(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 추진 ..... 61
공동 축산 클러스터 추진 및 가축사육제한 구역 명확화 ..... 62
외국어선 불법 조업 등 피해어민 국가보상 제도화 확립 ..... 64
도서지역 방문객 여객선 운임 할인 ..... 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66
폐교 활용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 ..... 67


### 문화복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VR(가상현실)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 69
문화예술체육클럽과 서포터즈 지원 강화 ..... 70
문화예술힐링센터 전국적 확대 ..... 71
공감과 소통의 문화예술교육 확대 ..... 72

민심이
중심이 되는 나라

# 진짜민심은 여기!

3대 분야
173개 실천과제

##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아이돌봄 내실화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 77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 78
방과후둥지학교 설립으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육 통합 운영 ..... 79
학교에서 4차 산업 인재양성 교육 ..... 80
우리 아이 우선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81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조성 ..... 82
아동학대 대응 전담기관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 ..... 84
아동학대검사지표가 포함된 아동건강검진 의무화 ..... 85
청소년 역량강화 및 위기·소외·취약 청소년 맞춤형 복지 구현 ..... 86
전교조 중심 교장공모제 폐지 ..... 87
정시확대로 대입제도 정상화 ..... 88


### 엄마아빠


근로자 난임 휴가 확대, 난임 휴직 도입 ..... 91
난임시술 국가지원 횟수제한 폐지 ..... 92
모자보건지소 전국적 확대 및 운영시간 확대 ..... 93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유급화 ..... 94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 95
이른둥이(미숙아) 가정 지원 강화 ..... 96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 등 엄마아빠 육아휴직 보장 ..... 97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공기청정기 설치, 위생점검 의무화) ..... 98
장난감 도서관 전국적 확대 및 편리한 장난감 반납 지원 ..... 99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문화 인프라 확대 ..... 100
한부모도 마음껏 양육!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 101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 102


### 어르신


노인복지청 설립 ..... 105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 106
어르신 재산세 대폭 감면(공시지가 3억 원이하) ..... 107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 108
홀로 어르신 지원 강화 ..... 109
중증 와상 어르신 거주 시설부터 자동대소변 처리기 단계적 도입 ..... 110
경로당 국가 지원 확대(식사도우미, 주치의제도, 양곡비, 냉·난방비) ..... 111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 ..... 112

민심이
중심이 되는 나라

# 진짜민심은 여기!

3대 분야
173개 실천과제

## 행복을 잇다!

### 장애인


장애인기본법 조속 추진 115
특수교육과 운영 전국 대학교에 특수학교 설립 116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117
모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서비스 118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119
공공 교통수단·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 120
장애인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121


### 여성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강화 123
미투 신고 피해자 보호강화 및 2차, 3차 피해 방지 위한 적극지원 124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양성평등 확대 126


### 청년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129
「청년안심주택」 및 「행복연합기숙사」공급 확대 130
쉐어하우스 거주 청년층, 독립세대주 권한 부여 132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설치 133
취업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대출 134
군부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전 부대 확대 배치 135
청년 장병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도입 136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137
채용과정의 공정화 및 투명화 138
재도전이 가능한 청년 창업 환경 조성 139
지속가능한 법률지원시스템으로 스타트업 지원 140
청년영농 농업생산 기반 지원 등을 통한 10만 청년 창농·귀농 확대 141
국내 관광 발전 위한 청년 대상 국내탐방 지원(꿈찾아발굴단) 142


### 다문화가정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확대 145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강화 146
농어촌 지역 결혼 이민자 일자리 마련 147
다문화 가정도 우선 직업교육훈련 대상에 포함 148
다문화 가정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149


###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친화 정책 확대 150

민심이
중심이 되는 나라

# 진짜민심은 여기!

3대 분야
173개 실천과제

##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69만 일자리 창출 ..... 155
법인세 인하 ..... 156
신(新)중년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 컨설팅 ..... 158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 159
4차 산업 육성 ..... 160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확대 ..... 161
산학연 지원 확대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 162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164
수도권 낙후지역의 과도한 규제 합리화로 국토 상생발전 추구 ..... 165
문화 콘텐츠산업 활성화 위한 세금 공제 확대 ..... 166
최저임금제도 혁신 ..... 167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168
원전안전국가, 원전안전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169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 촉구 ..... 171
노후 1톤 경유트럭을 LPG 트럭으로 교체시 300만원 지원 ..... 172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 173
영유아·노약자 이용시설부터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 174
미세먼지 측정기 재설치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 175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 176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로 미세먼지 저감 ..... 177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 178
「환경친화적 선박법」제정 및 지원금 확대 ..... 179
선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AMP(육상전원공급설비) 확충 ..... 180


### 안전한 대한민국


의료기관, 노인·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183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화재 안전관리 강화 ..... 184
흔들림 없는 지진 안전대책 추진 ..... 185
재난피해 복구지원 확대로 피해주민의 조속한 재기 지원 ..... 186
첨단기술과 융합한 한국형 재난안전제품 개발 ..... 187
생활안전 문제해결에 과학기술 활용 ..... 188
경찰·소방공무원 보수 및 위험 수당 인상 ..... 189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범죄취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강화 ..... 190
흉악범죄자 처벌 및 관리 강화 ..... 191
타워크레인 등 현장근로자 안전망 확충 ..... 192
수요자 맞춤형 전문 기상방송 및 재난방송 제작 ..... 193
종합병원 전담약사 배치로 환자 약물안전 강화 ..... 194
위해우려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 195
병원 위급상황 발생 시 중환자실 환자 즉시 전원조치 ..... 196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화생방대피소 건립 및 방독면 보유로 국민생명 보호 197

민심이
중심이 되는 나라

# 진짜민심은 여기!

3대 분야
173개 실천과제

#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당당한 외교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대응 외교력 강화 ..... 199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 구축 ..... 200
'대북 퍼주기'를 막고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시대 개막 ..... 201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 202
사병 장애보상금 현실화 ..... 203
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204
군인 정년연장 적극 추진 및 전역 후 일자리 확대 ..... 205
참전 명예수당 50만원으로 인상 ..... 206
예비군 훈련수당 5만원으로 현실화 ..... 207
보훈회관 건립 및 제3현충원 조성 ..... 208
안보희생지역(접경지역)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 209
탈북민의 분단고통 치유를 위해 적극 노력 ..... 210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외국 방문 지원 ..... 211


## 국가개혁


자녀세대 세금폭탄 방지법 제정 ..... 213
국민 건강 위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 214
포털사이트 정상화 위한 '드루킹 방지법' 추진 ..... 215
공정한 방송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 ..... 216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사회주의식 기업경영간섭 저지 ..... 217
좌편향 사회주의 역사교과서 퇴출 ..... 218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권력형 갑질 근절 ..... 220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 221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민주권 강화 ..... 222
국선전담변호인 선임권을 국민에게 ..... 224


## 지방자치


이장·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및 법적지위 부여 ..... 227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 구현 ..... 228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 229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 230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으로 누구나 손쉽게 자원봉사 참여 ..... 231
인구감소지역 종합대책 추진 ..... 232


##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개헌 추진 ..... 235

# 1

## 서민 · 중산층 · 노동자를 위한
# 희망을 잇다!

진짜민심으로
서민·중산층·노동자를 위한
희망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 서민·중산층 살림살이가 더 나아집니다!

- 유류세 인하
- 버스, 지하철 통합 월정기권 교통카드 도입
- 알뜰폰 활성화
- 공짜 데이터 스폰서 요금제 확대
- 가계의 금융 부담 대폭 낮추기
- 예금자 보호한도 7,000만원으로 확대
- 납부한 고용보험의 20% 환급으로 퇴직자 지원
- 청년 · 어르신 연금 사각지대 해소
-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 자살이력 가정, 재산 / 소득 상관없이 위기가정 지정



01 희망을 잇다! | 가계경제

## 유류세 인하

**현재**

▶ 최근 국내 기름값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세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서민 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은 가중

▶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필요

-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로 구성. 여기에 부가가치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 수수료 등이 더해짐
- 주유소 판매가 중 유류세 비중이 휘발유는 61%, 경유는 52% 수준(2017년 기준)

**약속**

▶ 2,000cc 미만 승용차 유류세 50% 인하

- 2,000cc 미만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대한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50% 인하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개)」, 「개별소비세법(개)」

02 희망을 잇다! | 가계경제

# 버스, 지하철 통합 월정기권 교통카드 도입

**현재**

▶ **버스, 지하철 요금이 가계부담의 큰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는 월정기권을 폐지하고 요금할인제도만 도입 중**

**약속**

▶ **횟수제한 없는 월정기권도입(학생 3만원, 성인 5만원)**
- 4인가족 기준으로 약 월 10~15만원(연간 120~180만원)의 교통비 부담 획기적 경감 효과

▶ **수도권 통합정기권 운영 등 광역알뜰카드 출시**
- 지하철,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 등 모두 이용 가능



03 희망을 잇다! | 가계경제

# 알뜰폰 활성화

**현재**

▶ **가계 통신비 경감 정책으로 '알뜰폰활성화' 필요**
- 현재 10%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알뜰폰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을 원하는 소비자 수요 충족

**약속**

▶ **알뜰폰 전파사용료 다년간 면제(3년)**
-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매년 결정되는 구조로 장기적 사업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 개선

▶ **가계통신비 경감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04 희망을 잇다! | 가계경제

# 공짜 데이터 스폰서 요금제 확대

**현재**

▶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은 광고 / 온라인 쇼핑 등으로 수익을 얻는 포털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
- 제로레이팅 도입시 연간 가계통신비 4,500억원 절감 가능

▶ **국민의 통신비 경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성장 아젠다 발굴 측면에서 제로레이팅 도입 적극 추진 필요**

**약속**

▶ **사용자는 무료, 제로레이팅(스폰서요금제) 도입**
-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콘텐츠 제공업자가 부담

▶ **정부 주도 공공서비스로부터 민간 분야까지 확대**
- (청년취업 지원) 워크넷 등 정부 제공 주요 취업관련 서비스 데이터 비용 정부가 부담
- (생활밀착형 지원) 코레일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이용 데이터 비용 정부가 부담

▶ **제로레이팅(스폰서요금제) 도입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05 희망을 잇다! | 가계경제

# 가계의 금융 부담 대폭 낮추기

**현재**

▶ **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 실손보험 등의 의료비 증가로 인해 가정경제 큰 부담**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 필요**

**약속**

▶ **저신용자 중금리대출 확대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비대면 신청 확대 등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 **실손 의료보험료 부담 낮추기**
- 국무총리실(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 중심,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연계 관리 강화

▶ **대출 금리 체계 개선 통한 과도한 예대마진 방지**
-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등

▶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제)」, 「은행법(개)」**

06 희망을 잇다! | 가계경제

# 예금자 보호한도 7,000만원으로 확대

**현재**

▶ **금융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18년째 5,000만원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 한도의 확대 필요**

※ 국제통화기금(IMF): 1인당 GDP대비 2배 이상 권고,
우리나라 : 2001년 당시 3.7배 수준이었으나 2016년 기준 1.6배 수준 축소

**약속**

▶ **예금자 보호한도 7,000만원으로 확대**
- 현행 모든 금융업권별 5,000만원 → 7,000만원
- 금융업권별(은행, 보험, 저축은행, 증권 등) 보호한도 차등 검토

▶ **「예금자보호법(개)」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



07 희망을 잇다! | 가계경제

# 납부한 고용보험의 20% 환급으로 퇴직자 지원

**현재**

▶ **현행 고용보험은 미환급(소멸형)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부족**

**약속**

▶ **납부한 고용보험의 20% 퇴직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
- 고용보험 가입자가 20년이상 근무하고 중도에 실업급여 수령 없이 퇴직하는 경우, 총납입금액의 20%를 해당 퇴직자에게 환급

▶ **「고용보험법(개)」**

08 희망을 잇다! | 가계경제

# 청년 · 어르신 연금 사각지대 해소

**현재**

▶ 현재 국민연금 납부시 소득자 본인 납부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전업주부, 27세미만 학생, 은퇴부모 등) 의 연금을 대납할 경우 소득 공제 안됨

▶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60세대 3가구 중 1가구 더블케어 (자녀와 부모 동시 부양) 상태로 나타남 (2017.12.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취업난과 조기퇴직으로 최소 10년 납부기한을 못 채우는 가입자가 대부분
- 각각의 가족구성원이 서로 의지하기보다 향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대안 필요

**약속**

▶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국민연금 대납시 소득공제 혜택

-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겨 줌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지원



09 희망을 잇다! | 가계경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현재**

▶ 베이비부머(1955 ~ 1963년생) 세대의 60% 이상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이 없거나 미흡한 상황이며 자산 구성 역시 부동산 위주(81.9%)로 되어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확보 시급

▶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의 급속한 지출 확대로 공적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는 불가피한 상황

**약속**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구분 없이 연금계좌 합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혜택
- 영세사업장 근로자 노후보장 지원

▶ 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 추가

- 50세 이상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에 한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추가 확대
- 은퇴 직전 세대 노후 준비 지원 강화

▶ 「소득세법(개)」

10 희망을 잇다! | 가계경제

# 자살이력 가정, 재산/소득 상관없이 위기가정 지정

**현재**

- OECD 국가중 자살 1위 오명, 문정부 자살 예방책 쏟아내고 있으나 자살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 전무
- 대부분의 자살사례는 극심한 우울증에 기인,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연결고리 절실

**약속**

- 자살 이력(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이 있는 가정은 재산/소득 상관없이 위기가정으로 지정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긴급지원 연계체계 핫라인 (경찰서 - 복지기관) 구축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24시간 서비스 담당자 지정 운영
-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추가
- 「자살예방법(개)」, 「사회급여보장법(개)」



진짜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 주거복지

# 살기 좋은 주거환경 만들겠습니다!

-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로 서민 주거 환경 개선
- 노후아파트 재건축 요건 합리화로 주택공급확대
- 깡통전세피해 방지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인하
- 주차공간 공유하기로 주차난 해소
-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타운」육성

자유한국당

01 희망을 잇다! | 주거복지

##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로 서민 주거 환경 개선

**현재**

▶ **정부는 주택수요 대응과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 극복을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입(사업절차 간소화, 건축규제완화 등 혜택 부여)**

▶ **규정미비와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괴리로 수익성 부족문제 등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시행령상 층수 제한은 15층이지만, 서울시는 조례로 7층 이하로 제한하여 사실상 정비 사업을 막고 있는 실정
- 부지면적이 1만㎡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우며,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비용과 미분양 위험성도 여전히 존재

**약속**

▶ **기존 15층 층수 제한을 20층까지 확대**

- 기존의 대규모 택지 개발 방식을 소규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손쉬운 재개발 시행
- 서민 재산권 보호 강화

▶ **정비사업 대상지역 1만㎡ 미만에서 2만㎡미만으로 확대**

▶ **일반분양분 미분양 주택 발생 시 공공매입 대상에 포함**

▶ **비용보조 및 융자범위 대상 확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개)」**

02 희망을 잇다! | 주거복지

# 노후아파트 재건축 요건 합리화로 주택공급확대

**현재**

▶ 문재인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음

▶ 특히,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삼중주차를 하는 불편함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라는 꼼수를 이용해서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음

**약속**

▶ 재건축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바뀌는 오락가락 재건축 정책 방지
- 재건축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재건축 추진

- 주차 공간 부족현상, 상하수도 문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침수피해 가능성, 일조환경, 층간소음, 도시미관 등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



03 희망을 잇다! | 주거복지

# 깡통전세피해 방지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인하

**현재**

▶ 전국적으로 집값이 전세 값과 비슷하거나 혹은 오히려 그 밑으로 떨어지는 '깡통전세' 현상 발생

▶ 깡통전세 피해에 대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홍보부족과 비교적 비싼 보험료로 인해 가입을 꺼려하는 세입자가 많은 실정

**약속**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보증보험료 인하

- 대상 : 3억원 이하 아파트·다세대·단독·오피스텔
- 금액 : 1억 기준, 1년 보험료 50,000원으로 하향 조정

* 현재 아파트는 128,000원,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은 154,000원

▶ 보험료 할인(40%) 대상자 확대

- 연소득 6천만원이하 맞벌이부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1인가구까지 확대

* 현재는 연소득 부부합산 4천만원이하, 아이 3명 이상인 가정, 결혼한지 5년 이내 신혼부부, 장애인 가정 등 가능

04 희망을 잇다! | 주거복지

# 주차공간 공유하기로 주차난 해소

**현재**

▶ **주차공간 미스매칭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 자차로 출근을 한 거주자는 낮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비우게 되어 결국 낮에 빈 주차장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 반대로 상가나 학교, 교회 등 건물 주차장은 낮에는 차량으로 가득차지만, 밤에는 비교적 비는 공간이 많은 편임

**약속**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제도 전국으로 확대**

- 출근 혹은 외출로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다른 운전자와 함께 나누는 시스템
- 거주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월 3~4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고, 주차 신청자는 비교적 저렴한 요금(시간당 1,000원 내외)으로 편리하게 주차장 이용

▶ **야간주차장 공유제도 전국으로 확대**

- 야간에 비는 주차장이 공유되면, 이 주차구역은 야간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필요한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건물주는 매월 주차요금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차 신청자는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주차장 이용



05 희망을 잇다! | 주거복지

#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타운」육성

**현재**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와 대도시 원도심이 낙후되고 있음**

▶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불편 폭증**

▶ **과거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의 재개발 필요**

**약속**

▶ **전국 중·소도시를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전환**

- 개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교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 증진할 수 있는 도시 구현

▶ **대도시 원도심은 스마트타운으로 전환**

- 주거환경 중심 지역은 미래형 스마트 베드타운을 조성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여건 제공
- 대학이 밀집한 지역은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스마트 캠퍼스타운으로 조성
- 주차장·공원·녹지공간 확충, 복합문화시설 확대,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등을 통해 원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 병행

# 땀의 가치가 존중 받는 노동자의 삶을 만들겠습니다.

-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저소득층과 청년도 취업 수당 지급
-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원스톱 일자리 지원 서비스 구축
-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시스템 마련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지정휴가제 도입



01 희망을 잇다! | 노동복지

##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현재**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보다 영세사업자의 고용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을 초래

▶ 반면, 근로장려금(EITC) 제도는 부양가족,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

**약속**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소득 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대 지원
- 한부모가정, 단독가구 등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 범위 확대, 최대 지급액 대폭 인상 등

**예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 〈기존〉 |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추가 경우〉 |
|---|---|
| 연소득 1,623만원 | 연소득 1,623만원 |
| 근로장려금 98만원 | 근로장려금 353만원 |
| **총 1,723만원** ⇨ | **총 1,976만원** |

▶ 「조세특례제한법(개)」

02 희망을 잇다! | 노동복지

# 저소득층과 청년도 취업 수당 지급

**현재**

▶ **근로 빈곤과 실직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로 구성된 2층적 실업안전망이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기반 종사자 등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형태를 포괄하는데 한계

**약속**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으로 빈곤해결 및 청년고용안전망 구축**

- 대상 :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인 저소득층과 청년 (단,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 요건 완화 적용)
- 지원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 고용보험,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3층적 사회안전망 구축



03 희망을 잇다! | 노동복지

#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현재**

▶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낮아 실업자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실정**

**약속**

▶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장**

- 90 ~ 240일 ⇒ 120 ~ 270일

▶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

▶ **「고용보험법(개)」**

04 희망을 잇다! | 노동복지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현재**

▶ **경제성장률 저하 및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규모별, 노조유무별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 시간당 임금수준(2017년) : (대기업 정규직) 100 / (대기업 비정규직) 69.3 / (중소기업 정규직) 54.3 / (중소기업 비정규직) 40.4

▶ **문재인 정부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창출)와 반대 방향**

▶ **공기업 · 대기업의 일부 강성노조의 편향된 이념으로 노조 양극화도 심화**

**약속**

▶ **노동시장 유연화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 형성**

- 노동개혁 2법(「파견법」, 「고용보험법」) 개정
- 고용형태별 차별 및 격차 해소
- 고용에 따른 근로자의 불안해소 위한 임금차별 방지, 사회보험의 보호,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사회적 안전망 마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로 기업 생산력과 경쟁력 향상 (현행) 2주 및 3개월 ⇒ 1개월 및 6개월

▶ **양극화된 노조 구조를 혁파하여 노동약자 중심의 노동개혁 실현**

▶ **원 · 하청 간 격차 해소와 파견 · 계약직 등의 권리보호 위해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 **「파견법(개)」, 「고용보험법(개)」, 「근로기준법(개)」**



05 희망을 잇다! | 노동복지

#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원스톱 일자리 지원 서비스 구축

**현재**

▶ **2018년 3월 현재 실업률은 4.5%로 17년만에 최고 수준, 실업자수는 125만 7,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 **기존의 하향식 일률적인 지원제도는 취업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지원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 심화**

**약속**

▶ **고용 · 복지 연계 서비스 구축**

- 취업센터와 복지센터 양측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협력 강화. 특히, 빈곤계층이 취업지원 신청 시 자동으로 지자체 복지센터로 연결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최초 이력서등록부터 상담, 전략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자리 제공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 제공
-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센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등 제공
-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으로 활용성 및 접근성 증대

▶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 확대 및 질 좋은 일자리 발굴**

06 희망을 잇다! | 노동복지

#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시스템 마련

**현재**

▶ **현재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액 상습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각종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임금체불 금액이 1조 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만 5,430명에 달할 정도로 임금체불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정**

**약속**

▶ **임금체불 근절시스템 마련 및 근로감독 강화**
-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지연이자제 적용
-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 임금체불 사업장의 공개조건 완화
- 채용정보 사이트 내 임금체불 사업장 정보 공개
- 고액 상습체불사업주는 상시적 근로감독 강화
- 권역별 근로감독 강화
- 임금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방지 교육' 의무화

▶ **「근로기준법(개)」**



07 희망을 잇다! | 노동복지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지정휴가제 도입

**현재**

▶ **현행 「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와 60조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있으나 휴가 보장에 미흡한 실정**
- 2004년 7월부터 노사 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제도활용이 저조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은 절반 수준임

**약속**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
-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

▶ **지정휴가제 도입**
- 연차 휴가 중 최소 5일은 연 초에 미리 지정해서 사용

▶ **「근로기준법(개)」**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임차인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지원
-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강화
-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 조속 추진
- 대리운전 표준요금제 도입
- 강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01 희망을 잇다!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현재**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 가중과 근로자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음

▶ 정부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와 지속성 없음

**약속**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 의무화
-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권력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적정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최저임금법(개)」

02 희망을 잇다!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현재**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자율 권고 합의로 운영 중

▶ 현재 적합업종은 제조업 54개, 서비스업 19개 등 73개 품목 지정되었으나 2016년 부터 해제 품목이 나오기 시작
- 동반성장위원회는 2017년 8월 만료 예정이었던 적합업종에 1년 유예기간을 설정, 이 품목들에 대한 연장 만료일은 2018년 6월 30일

**약속**

▶ 상생 경제 구현 위해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 조속한 법제화

▶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생존권 보호와 육성 제도 마련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



03 희망을 잇다!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현재**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

▶ PG사(전자결재대행) 연계 온라인 영세 사업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 방치
※ 같은 매출규모 영세사업자인 경우, 오프라인(0.8%), 온라인(3% 정도) 상당한 수수료 차이

**약속**

▶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인하
- 영세 가맹점(3억이하) : 0.8% → 0.5%
- 중소 가맹점(3억 ~ 5억이하) : 1.3% → 1.0%

▶ 가맹점 수수료 등 거래조건 관련 단체 설립 요건 완화

▶ 「여신전문금융업법(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

04 희망을 잇다!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임차인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현재**

▶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상가임대차 계약에는 권고사항으로만 존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임대차 계약 관련 불명확성으로 임대인의 갑질이 가능한 구조

**약속**

▶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법무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보증금, 차임액, 기간, 수선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계약 당시부터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만료시 분쟁을 미연에 방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



05 희망을 잇다!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지원

**현재**

▶ 급속도로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내수위축 등으로 전통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 전통시장 매출액 : 2005년 32조 7,000억원 ⇒ 2013년 20조 7,000억원으로 감소

**약속**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안전시설 등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 2021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상점가 70% 추진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 상가권리금 보호대상에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 포함

▶ 포털사이트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 (가칭) '포털갑질방지법' 제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지원 확대
- 전통시장에 입주하는 청년상인 창업준비 One-Stop 지원

06 희망을 잇다!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강화

**현재**

▶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2012 ~ 2016년) 총 236건에 피해액은 502억원에 달하고, 화재 발생시에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는 경향이 커 화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약속**

▶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화재 안전관리 강화 추진
-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주택 밀집지역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등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 확대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시설물 재난보험 도입

▶ 관할 소방서에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설계도를 미리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 · 훼손하는 화재안전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과태료 → 형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 「풍수해보험법(개)」 등



07 희망을 잇다!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 조속 추진

**현재**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1997년)이후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의 매출은 급격히 증가했으나, 전통시장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

**약속**

▶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 도입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고객 및 매출 증대 도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

08 희망을 잇다!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대리운전 표준요금제 도입

**현재**

▶ 대리운전 산업은 전체 시장규모가 연3조원에 달하며 대리운전업체 8천여개, 대리운전기사 20만여 명, 콜센터 상담원수 3만 명으로 추산되는 거대한 시장임과 동시에 특수한 업종임

▶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표준화된 요금제가 없어 시장의 혼란을 야기

**약속**

▶ 대리운전 요금에도 표준요금제 도입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표준요금이 산정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리운전 요금에도 표준요금제 도입해 시장의 안정과 국민에게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 업종 특수성 감안 야간 수당 등 별도 규정 마련

▶ 대리운전업계에 무분별한 대기업 진출 방지로 소상공인 보호

09 희망을 잇다!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강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현재**

▶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증가의 97%를 담당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 성장 정체, 수출 감소, 대외통상 압력 등 불안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

**약속**

▶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경제로 전환
- 중소기업 혁신성·생산성 제고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도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스마트형 공장 확산으로 제조(생산) 현장 혁신
- 스마트공장 고도화 표준화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중소·중견 R&D 투자 확충 및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 촉진

▶ 산업 단지내 청년 맞춤형 복합 문화시설 확충
- 젊은층 선호 공공시설 및 복합 쇼핑몰 확충으로 청년 선호 산업단지 조성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및 주거공간 등) 확보,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 공업용수 리사이클링을 포함한 에너지 절감 및 노후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기업 지원

▶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 가업승계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

# 살기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료 국비지원 70%로 확대
-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 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
- 농약 살포용 드론 무료 보급
- 농어촌 1,000원 택시 및 농어촌 교통할인권 추진
- “함께 한밥상”(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 추진
- 공동 축산 클러스터 추진 및 가축사육제한 구역 명확화
- 외국어선 불법 조업 등 피해어민 국가보상 제도화 확립
- 도서지역 방문객 여객선 운임 할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폐교 활용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



01 희망을 잇다! | 농축산어업인

## 농어업재해보험료 국비지원 70%로 확대

**현재**

▶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으로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 (2016년, 27.5%)

**약속**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보장
- 현행 : 국비 50% + 지방비 (0 ~ 50%, 지자체 자율 지원)
- 추진방안 : 국비 70% + 지방비 20%

* 가입률이 저조한 농업수입보장 보험 또한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 점진적 추진

▶ 보험 목적물의 대상 범위 확대
- 가축질병치료보험 및 건조농산물 포함

▶ 재해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복구지원 단가 인상

▶ 65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국비 지원 추진 (해당 거주지 시·도 범위 내 병원 국한)

▶ 「농어업재해보험법(개)」

02 희망을 잇다! | 농축산어업인

#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 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

**현재**

-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합원 예·적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각종 과세특례가 2018년 말 종료 예정
- 자연재해, 가축질병, 시장개방 등 농어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 농업부문 조세감면 축소는 경영위축과 농업인 소득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어 2018년 12월 감면기한 종료항목 16건 (8,300억 규모)에 대한 일몰시한 연장 필요

**약속**

- 2018년 12월말로 감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지원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5년 연장
  - 면세유 : 농업생산비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용 유류가격 안정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 농·수협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 농어업인 서민층의 소득 보장
  - 농·수협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 비과세 :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 계약이전에 따른 부실조합 양수재산 취득세 면제 : 농업경영체 육성과 조합 간 원활한 합병추진
- 「조세특례제한법(개)」



03 희망을 잇다! | 농축산어업인

# 농약 살포용 드론 무료 보급

**현재**

- 농번기에 농촌 인력부족과 비용부담이 큼

**약속**

-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약살포용 드론을 보급하여 인건비 부담 절감
  - 드론충전용 전기는 농어촌 전기 사용(면세)
  - 전문적인 드론운영자 배치로 일자리도 창출
- 농촌 지방자치단체당 15대씩(읍면단위 1대씩) 농업기술센터에 배치
- 도농복합지역의 경우는 인근지역 농약피해 모니터링 (감지기 등) 비용 지원

04 희망을 잇다! | 농축산어업인

# 농어촌 1,000원 택시 및 농어촌 교통할인권 추진

**현재**

▶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혜택은 수도권 및 대도시 주민들과 비교하여 교통비용 측면은 물론 이동 수단의 공급량 측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

▶ 10년간 통일호, 통근열차 등 저가 이동수단이 지속적으로 폐지·축소되어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은 나날이 증가

**약속**

▶ 버스요금에 준하는 1,000원으로 택시 이용

▶ 장거리 이동(군 이외 지역) 지원을 위한 가칭 '농어촌 교통 할인권'(교통비 할인권) 지급
- 대도시 거주 65세 이상 노약자 무료승차 등 역차별 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



05 희망을 잇다! | 농축산어업인

# "함께 한밥상" (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 추진

**현재**

▶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품앗이 등 따뜻한 전통문화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어르신들의 돌봄문화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함양 그리고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촌마을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약속**

▶ 공공기능직불제 성격의 "함께 한밥상" (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 사업 추진
- 마을 사랑방 역할 활성화
- 영농철 식사준비 인력 지원
- 봄·가을 각 15일씩 총 30일간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제)」

06 희망을 잇다! | 농축산어업인

# 공동 축산 클러스터 추진 및 가축사육제한 구역 명확화

**현재**

▶ **미허가 축사 정상화를 위한 26개 법안의 정리가 필요하지만 미흡한 상황**

▶ **축산시설 현대화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축산 단지가 산재되어 축산 오・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 등 축산악취 민원 증가 추세**

▶ **개별 무허가 축사의 이전 역시 지역민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

▶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사육제한 구역 설정으로 축산업 신규 진입 억제**

**약속**

▶ **미허가 축사 정상화 및 축산진흥을 위한 국무총리 중심 컨트롤 타워 구성 추진 촉구**
- 지자체 적법화 이행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을 통한 중앙정부 통일 지침 마련, 불합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개선, 행정절차 및 요건 간소화, 입지제한 지정 전 축사대책 마련 등

▶ **공동 축산 클러스터 추진**
- 간척지 등 유휴지 활용
- 광역단위 시설 개선,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첨단 자동화 공동축사, 첨단 도축시설, 연구지원 시설을 일원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생산 시스템(체계) 구축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

▶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 구역 법제화**
-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설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거리 범위를 정부의 권고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가축분뇨법」에 명시

▶ **위생적 사육환경 조성**
- 사육시설 확충 및 사육공간 확대, 항생제 남용제한 등

▶ **송아지생산안정제 안정기준가격(210만원) 인상, 가임암소 보전금 차등 지급 폐지**

▶ **「가축분뇨법(개)」**

# 07 희망을 잇다! | 농축산어업인

## 외국어선 불법 조업 등 피해어민 국가보상 제도화 확립

**현재**

- ▶ 중국어선의 입어 규모 증가로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어업 경제가 날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동해안의 경우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오징어 등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 ▶ 또한 접경지역 어업인의 경우 군사훈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이유로 상시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임

**약속**

- ▶ 외국인 불법어업 활동 벌금 상향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을 위한 지원 제도화(피해어민 국가보상제) 추진
  - ※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 담보금 (2017년 166억)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
- ▶ 접경지역 어업인 수산직불금 지급
  - 도서지역 어업인에 한하여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 인공어장, 어촌회관, 치어방류 사업 등 지원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개)」



# 08 희망을 잇다! | 농축산어업인

## 도서지역 방문객 여객선 운임 할인

**현재**

- ▶ 도서 주민은 대체교통 수단마저 전무하여 여객선 이용에 부담이 큰 상황, 도서 접근성 향상 및 연안여객 운송과 육상운송 간 지원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
  - 여객운송수단별 단위 운임 (1Km당 운임) 비교 (2016년 기준)

| 구분 | 여객선 | 시외버스 | KTX | 지하철 |
|---|---|---|---|---|
| 1Km당운임 | 433.8원 | 116.1원 | 164.4원 | 105원 |

**약속**

- ▶ 여객운임 지원으로 방문객(관광객) 여객선 운임 할인
  - 여객운임 지원으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육상의 버스운송 체제와 같이 바다 항로에 대해서도 준공영제 도입
  - 일반항로(민영) + 보조항로(공영제)로 전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1일 생활권 구축
  - 선박 현대화 및 접안시설 개선과 선원 처우 향상
- ▶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해운법(개)」

09 희망을 잇다! | 농축산어업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현재**

▶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농어촌을 중심으로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한시법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 다수 발생함.

* 특별조치법 시행사례 :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 (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약속**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한도로 특별법 시행
- 농어촌을 중심으로 법을 잘 몰라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10 희망을 잇다! | 농축산어업인

# 폐교 활용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

**현재**

▶ 2018년 3월 기준, 폐교는 3,752개교. 학생 수 감소 및 학교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미활용 폐교재산의 33.6%인 420개교가 미활용(2,339개교는 매각).

▶ 2016년 10월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공립학교 이적지 재산은 80개교로, 대장가격 기준 4,873억 원 수준임

- 이 중 미활용(활용 추진 중인 재산 포함) 재산은 37개교, 미활용률은 46.3%로 폐교재산 미활용률 30.9% 보다 저조
- 현행법상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의 경우는 폐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약속**

▶ 폐교 활용 대상시설에 캠핑장(야영장)과 귀농 · 어촌 지원시설 추가

▶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도 폐교 대상에 포함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

◉ 문화복지

# 열린 문화복지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겠습니다.

- 상상이 현실이 되는 VR(가상현실)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 문화예술체육클럽과 서포터즈 지원 강화
- 문화예술힐링센터 전국적 확대
- 공감과 소통의 문화예술교육 확대

자유한국당

01 희망을 잇다! | 문화복지

## 상상이 현실이 되는 VR(가상현실)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현재**

▶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의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발전에 따라 문화예술 전시, 관광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추세

▶ 향후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 이를 활용한 세계 각국의 경쟁 심화될 것으로 예상, 국가와 공공부문의 선제적 기반 구축 필요

**약속**

▶ 주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공연장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생생 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구축 지원

▶ 주요 관광지·역사문화유적지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생생 체감형 콘텐츠 구축 지원

▶ 지역별 VR 체험 투어 개발·운영
- 전시기관과 주요 관광지(문화유적지) 연계 VR 버스 운행

02 희망을 잇다! | 문화복지

# 문화예술체육클럽과 서포터즈 지원 강화

**현재**

▶ **생활체육분야 클럽 8,000여개, 문화예술분야 300여 개 클럽활동 추산**
- 2018년도 기준 종목별·지역별 4개 종목 스포츠클럽 리그 지원

▶ **체계적이지 못한 지원으로 지역별 축제 및 문화예술클럽의 난립**

**약속**

▶ **지역별 문화예술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내 동호회, 학교 및 기업의 문화예술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확대, 지원 기준 완화
- 기본 운영비 지원, 연계기반시설 확대
- 동일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상호협력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확대

▶ **문화예술스포츠클럽서포터즈 양성 및 지원**
- 기초교육 운영 서포터즈 활성화
- 교재 개발 및 실전 훈련(실습) 전문강사 양성
- 인적 네트워크 구성 연계 ⇒ 전국 연계 네트워크로의 확대

▶ **맞춤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 은퇴선수·은퇴지도자 공공스포츠 클럽 채용 의무화
- 프로그램 내 장애인·노인·여성 체육 종목 의무화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노인스포츠 지도사 고용)

▶ **「생활체육진흥법(개)」, 「문화예술교육지원법(개)」**



03 희망을 잇다! | 문화복지

# 문화예술힐링센터 전국적 확대

**현재**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정책 시행되고 있으나, 치유과정을 필요로 하는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
- 각종 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 위기 청소년, 군복무 부적응 병사, 도박중독자 및 가족, 게임 과몰입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사진, 융합 예술 등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약속**

▶ **생활권 중심의 지역별 문화예술치유 센터 확대**
-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현행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생활권 내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지진, 화재 등 재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문화예술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대상자 확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04 희망을 잇다! | 문화복지

# 공감과 소통의 문화예술교육 확대

**현재**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 능력 향상 등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증대**

-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부족
- 고령사회 진입과 같은 사회환경 변화로 다양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필요

**약속**

▶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터' 지원 확대**

- 현행 거점·권역별 시범 구축 ⇒ 생활권 내 (읍면동) 구축

▶ **소외계층 중심의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강화**

- 전국 40개 거점 기관 아동 대상 교육 ⇒ 지역 생활권 중심 전국 100개 기관으로 확대

▶ **농산어촌 대상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지원 확대**



진짜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2

## 우리가족 · 이웃사촌과

# 행복을 잇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행복한 스마일 대한민국
자유한국당이 만들겠습니다!

#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백년대계를 꽃피우겠습니다.

- 아이돌봄 내실화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 방과후둥지학교 설립으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육 통합 운영
- 학교에서 4차 산업 인재양성 교육
- 우리 아이 우선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조성
- 아동학대 대응 전담기관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
- 아동학대검사지표가 포함된 아동건강검진 의무화
- 청소년 역량강화 및 위기·소외·취약 청소년 맞춤형 복지 구현
- 전교조 중심 교장공모제 폐지
- 정시확대로 대입제도 정상화



01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 아이돌봄 내실화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현재**

▶ 文정부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아이돌보미 수당이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늘고, 경력단절여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아이돌봄요금에 부담을 느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끊으면 아이돌보미들의 실업률도 높아짐

**약속**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종합소득공제 중 교육비 항목 특별공제 대상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미스매칭 해소
- 수요가 높은 집중시간대에 아이돌보미 투입 강화 등

▶ 민간베이비시터 서비스 품질 관리
- 원하는 베이비시터 대상으로 결격사유, 건강 등을 인증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한 표준화된 교육 실시
- 이용자가 베이비시터의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소득세법(개)」, 「아이돌봄지원법(개)」, 「건강가정기본법(개)」

02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현재**

▶ **文정부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로 영어 학습 기회 박탈 및 사교육 증대 우려**

▶ **초등 단계는 회화 등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수업 성과가 높고, 특히 지역에 따라 학생들이 영어 문화에 노출되는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지적**

- 일부 지역은 별도 자치구 예산으로 원어민교사를 집중 배치하는 반면, 원어민교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를 접할 기회조차 없는 지역도 있음

**약속**

▶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부활**

▶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 동시수업 강화**

- 초등 단계에서는 한국인 교사가 설명을 하면서 원어민 보조교사가 발음이나 회화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습효과 및 학생 만족도 제고

▶ **영어체험 프로그램 참가 확대**

▶ **「선행학습금지법(개)」**



03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 방과후둥지학교 설립으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육 통합 운영

**현재**

▶ **방과후학교는 2017년 4월 기준 초·중·고교의 99.6%, 전체 학생의 58.9%가 참여**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여 돌봄 공백 발생**

**약속**

▶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방과후학교 체계' 신설 (가칭 : 방과후둥지학교)**

- 법적 근거 마련 및 돌봄행정 지원체제 확립 (교육청·지자체 협력시스템)
- 교육행정공무원 포함 전담 인력 학교별 배치
- 운영시간 및 대상 확대

▶ **교육지원청별 지역내 인력풀 관리 시스템 구축**

- 퇴직교원, 교·사대생(교육청과 해당대학 MOU), 학부모, 교육기부, 돌봄전담사, 자원봉사자 등을 일괄 관리

▶ **국가 교육과정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양적·질적 다변화**

- 학력향상형 : 기초학력 보강 프로그램, 심화 학습 프로그램 개설
- 특기적성형 : 예체능 교과 중심의 심화 프로그램 운영
- 정서안정형 : 놀이 문화 학습을 접목한 컬포츠 (Culture + Sports) 기반 프로그램 운영

▶ **「초중등교육법(개)」**

04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 학교에서 4차 산업 인재양성 교육

**현재**

▶ **지능정보사회 가치창출의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 · 중 · 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통해 창의력과 논리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 필요**

**약속**

▶ **'첨단미래학교' 확대, '지능형 학습플랫폼' 및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 컴퓨터실 노후 컴퓨터 전면교체 추진 및 부족한 교육 이수시간 확대
- 정보·컴퓨터 교사 양성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학교 무선망 프리존 전면 구축**
- 디지털교과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화상수업 같은 다양한 IT 기반 수업 지원
- 스마트패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해주는 중계기(AP) 등을 지원하여 교육콘텐츠 공유

▶ **전국 교육지원청에 '4차 산업혁명 체험실(센터)' 설치**
- 인공지능 프로그래밍·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기술을 활용한 교육, 드론·3D 등 최신 기자재 구비하여 체험 기회 적극 제공

▶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제)」**



05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 우리 아이 우선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현재**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최하위 수준**
※ 교통사고 사망자(10만 명 당, 2015년도) : (영국) 2.8명, (일본) 3.8명, (독일) 4.3명, (한국) 9.1명

▶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가 늦어지거나, 설치되더라도 적시에 보수·보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약속**

▶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확대**

▶ **어린이 스쿨존 내 동시신호제(All-Green, All-Red) 도입**

▶ **스마트 신호등 설치 확대**
-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신호 길이를 자동으로 조정

▶ **보행자 중심의 속도 관리체계로 전환**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 일부를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이용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제)」, 「국가재정법(개)」, 「도로교통법(개)」**

06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조성

## 현재

▶ **현재 유 · 초 · 중등학교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대상건물 31,797동 중 내진성능 적용건물 8,955동(28.1%), 비적용건물 22,842동(71.9%)**

▶ **스프링클러 설치율 16%**

▶ **학교 내 CCTV 설치율은 99% 이상이나, 고화소 설치율은 35.8%, 통합관제센터 연계율은 57%에 불과**

▶ **에어컨, 난방기 등을 전기료 때문에 마음껏 틀지 못하는 상황**

-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학교가 운영비의 4분의1을 전기료에 사용
- 2016년 동·하계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율을 15%에서 50%로 상향했으나, 추가 할인 필요

## 약속

▶ **전국 모든 학교 지진 대비 내진 보강**

**① 경주 · 포항 : 2018년도 안에 비적용건물 대상 내진보강 완료**

**② 지진위험지역(경북 · 경남 · 대구 · 울산 · 부산)**

- 2018년도부터 매년 2,400억 원을 투입해 5년 이내 내진보강 완료

**③ 그 외 지역**

- 2018년부터 매년 1,800억 원, 25년부터는 매년 7,200억 원 투자해 10년 내 내진보강 완료

▶ **모든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의무 대상에 학교 포함하는 관련 법령 개정

▶ **유치원 및 초 · 중 · 고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

- 이른 더위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하계 할인기간(7 ~ 8월)에서 6월을 포함하는 등 기간 확대

▶ **학교 내 고화소 CCTV 확충 및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의무화**

-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전체 CCTV 중 인물식별이 어려운 CCTV를 고화소 이상으로 전량 교체(2022년)

▶ **「소방법(개)」**

07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 아동학대 대응 전담기관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

**현재**

▶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발표 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조기예방 및 사후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 증가**

- 아동학대예방 관련 업무 7개 기관에 나눠 위탁 진행되고 있어 부처 간 업무 연계성,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지고,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으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약속**

▶ **아동학대 대응 전담기관인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

- 아동학대 관련 7개 위탁사업 중 6개 사업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로 피해아동 지원

▶ **「아동복지법 (개)」**

08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 아동학대검사지표가 포함된 아동건강검진 의무화

**현재**

▶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전체 아동학대 중 82%)되며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조기발견 어려움**

▶ **영유아(0 ~ 5세) 및 학동기(6 ~ 18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님**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대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애주기별 아동 건강검진 활용 필요**

**약속**

▶ **아동 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아동학대 검사 지표' 추가**

▶ **아동 보호자에 건강검진 수검 의무화 및 수검여부 실태조사 실시**

▶ **아동복지시설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보호시설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

▶ **「아동복지법(개)」**

09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 청소년 역량강화 및 위기·소외·취약 청소년 맞춤형 복지 구현

**현재**

-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여건은 미비한 상황
- 15세 이상 10대 근로청소년은 대략 2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근로 경험률은 60% 상회, 청소년의 근로이익 보호가 절실

**약속**

- 청소년직업체험전문센터 설치, 직업체험교육 강화, 진로체험 바우처 개발
- 청소년 창의력 경진대회 및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쉼터, 중·장기 이용 가능한 맞춤형 쉼터 확대
-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습욕구향상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확대 등 청소년 근로이익 보호 강화



10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 전교조 중심 교장공모제 폐지

**현재**

- **교장공모제에 의하여 '좌편향' 인사가 교장으로 대거 취임하게 되면서 진보교육감 – 전교조 교장 – 전교조 교사로 이어지는 카르텔이 교육현장 왜곡**
  - 교육부 '내부형 교장공모제 당선 명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 제도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50명 중 80%에 해당하는 40명이 전교조 출신
  - 한국교총 설문조사(2017.12)를 보면 응답 교사의 81%가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 2015년 전국 고2,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자료 분석 결과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보다 낮음
- **교장공모제 확대로 교원승진제도를 믿고 성실히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무력감 안김**

**약속**

- 무자격 교장공모제 대폭 축소 및 공모제 응시 가능한 교원자격 강화
- 도서 벽지 근무교사와 학교현장 보직교사 우대로 공정한 교원 승진제도 확립
- 「교육공무원법(개)」

11 행복을 잇다! | 우리아이

# 정시확대로 대입제도 정상화

## 현재

▶ **文 정부, 대학의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폐지 추진**

- 수시 선발인원이 70%를 넘은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위주 선발 확대 우려
- 학교생활 중 교과 비교과 활동을 못한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에 갈 기회 박탈

▶ **수시 확대가 심화됨에 따라 대입제도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공정 논란**

-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금수저전형, 깜깜이전형, 복불복전형 등으로 불리며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

▶ **정시 축소·수시 확대 경향과 달리 수험생은 "수시 줄이고 정시 강화" 선호**

* 수험생 70%가 정시 강화 찬성,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에는 59.7%가 찬성(유웨이중앙교육이 2017년 4월, 대입 수험생에게 설문조사, 486명 응답)

▶ **'2017년 1인당 사교육비 조사 결과', 고교생 1인당 평균 51만 5천원 지출**

-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및 수시 강화도 사교육비 상승요인

## 약속

▶ **대입 정시 확대**

- 대학별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비율 축소 조정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 대학별로 선발기준, 채점기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 입학사정관 제척 회피 법제화
- 학생부 부풀리기 금지 : 학생부 기록 변경 원칙적으로 금지
- 학교장추천전형의 경우, 추천기준 · 추천과정 · 추천결과 발표 공개
- 대학입시 학사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즉각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정책에서 완전 배제

▶ **대입전형 6년 예고제 추진으로 대입혼란 최소화**

▶ **소외계층 선발 확대**

- 성적 이외의 요소를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고유한 특성을 교육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
- 정원내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리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 **「고등교육법(개)」**

# 가족행복시대, 가정의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근로자 난임 휴가 확대, 난임 휴직 도입
- 난임시술 국가지원 횟수제한 폐지
- 모자보건지소 전국적 확대 및 운영시간 확대
-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유급화
-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 이른둥이(미숙아)가정 지원 강화
-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 등 엄마아빠 육아휴직 보장
-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공기청정기 설치, 위생점검의무화)
- 장난감 도서관 전국적 확대 및 편리한 장난감 반납 지원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문화 인프라 확대
- 한부모도 마음껏 양육!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01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 근로자 난임 휴가 확대, 난임 휴직 도입

**현재**

▶ 난임시술 1회 당 병원을 최소 2 ~ 3회 방문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난임휴가를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로 규정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 현행법상 난임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 국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제한 없이 인공수정 시술 당일 1일, 체외수정 시 2일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최대 2년까지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가능

**약속**

▶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난임휴가 보장
- 1회 시술 당 1일 휴가
(단, 체외수정의 경우 1일 추가 휴가 보장)

▶ 일반 근로자도 난임치료휴직 보장(최대 90일까지)

▶ 난임으로 인한 퇴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게 개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

02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 난임시술 국가지원 횟수제한 폐지

**현재**

▶ 난임부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난임시술 출생아도 증가
- 2004년 약 12만명 → 2014년 약 21만명으로 10년 사이 2배 증가, 전체부부 7쌍 중 1쌍(15%)은 난임

▶ 정부에서 난임지원 시술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감소하였으나, 10회로 횟수제한

▶ 10회 시술(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횟수제한 있어, 시술횟수 소진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개인이 수백 ~ 수 천 만원까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약속**

▶ 첫 아이 가질 때까지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제한 폐지
- 시술제한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불안 및 스트레스 해결



03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국민정책 아이디어

# 모자보건지소 전국적 확대 및 운영시간 확대

**현재**

▶ 대부분의 엄마들이 포털사이트, 블로그, 맘카페 등 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 있음

▶ 출산 전후 육아와 관련된 보건의료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 최근 지자체에 출산, 육아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모자보건지소가 개설되고 있으나 평일 9시 ~ 6시까지 운영해 맞벌이 부모나 워킹맘들은 접근성이 떨어짐

**약속**

▶ 모자보건지소 설치 확대

▶ 모자보건지소 운영시간 확대
- 평일 중 하루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
- 토요일은 격주 운영

▶ 모자보건지소에 '출산코디네이터제도' 운영
- 출산과정, 출산 이후의 심리상담 및 안정 지원
- 출산 이후 아이들의 접종시기, 육아상식, 산후 우울증과 관련한 맞춤형 케어 지원
- 임신과 출산 경험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재교육해 지역의 보건소에서 '출산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모자보건법(개)」

04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유급화

**현재**

▶ **'아빠의 달' 시행을 비롯해 아빠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외 중소기업은 거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아빠의 달이란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

**약속**

▶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유급화**

- 현행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 그중 최초 3일만 유급에 불과

▶ **육아 우수동참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등**



05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현재**

▶ **출산현실 무시한 무차별 현금복지(아동수당 도입)로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불투명**

- 국회 합의로 소득수준 90% 까지 지급(2월 국회 통과)키로 했음에도 향후 국가 재정 부담과 출산현실을 무시한 채 100% 지급 재추진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만 몰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기자간담회)

▶ **다수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현실, 출산비용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약속**

▶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비용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소득세법(개)」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지자체 관내 유휴 병·의원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기존 산후조리원 중 일부를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전환
- 인구수가 적은 군단위는 복수군 공동 공공형 산후 조리원 설치

06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 이른둥이(미숙아) 가정 지원 강화

**현재**

▶ **현대사회 스트레스 증가, 만혼, 난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미숙아 출산 증가하고 있으나 미숙아에 대한 지원 부족 (의료비, 양육환경 개선 등)**

- 미숙아 출생 현황 : 2004년 2만1749명에서 2015년 3만 408명으로 지속 증가세
- 이른둥이 부모 59.3%, 향후 출산 계획 거부 (2017년) 및 퇴원이후 관리 어려움 호소

**약속**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30일 추가 부여**

▶ **미숙아 전체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무료 접종 확대**

▶ **미숙아 가정 방문서비스 전국 확대**

- 지역보건소와 병원간 협약

▶ **11. 17 이른둥이(미숙아)의 날 지정**

▶ **「모자보건법(개)」**



07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 등 엄마아빠 육아휴직 보장

**현재**

▶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입법 개선 필요**

- 현행법상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불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단 1회만 허용 등 제약이 큰 상황

**약속**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1회 ⇒ 3회)**

▶ **육아휴직 부부합산 2년 사용 후 3개월 추가 부여**

- 부모에게 각각 1년씩 부여하는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1년씩 사용 후 부모 중 1인에게 3개월 추가 부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 「고용보험법(개) 및 시행령(개)」 등**

08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 (공기청정기 설치, 위생점검 의무화)

**현재**

- 도심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 아파트나 도시의 놀이터는 주변에 차도가 많아 위험하고, 미세먼지와 위생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음
- 최근에는 키즈카페 같은 공간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위생점검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위생에 대한 우려가 있음

**약속**

- 지역 실내체육관 내 실내놀이터 시설 확대
-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위생점검 의무화

09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 장난감 도서관 전국적 확대 및 편리한 장난감 반납 지원

**현재**

- 아이들의 장난감에 대한 흥미기간도 짧고, 고가의 장난감이 많아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 확대 필요
- 접근성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 이용률에 현저한 차이가 나 아파트 특정 구역, 지역별 거점구역에 장난감 반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약속**

- 장난감 도서관이 없는 지자체에 확대 설치
  - 가계의 부담을 절감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아파트, 동네별 거점장소 지정해 반납창고 설치
  - 장난감 반납을 용이하게 해 부모들의 만족도 제고

10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문화 인프라 확대

**현재**

- 부모들의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어린이 전용 미술관 및 박물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적은 편임
- 유아기부터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 및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어린이 전용 미술관 및 박물관의 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약속**

-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지역 문화원 등에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관 및 박물관 마련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 관련 문화 인프라의 접근성을 향상
  - 미술관 및 박물관에 배치할 영유아 전문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11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 한부모도 마음껏 양육!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현재**

- 아이를 키우는 가족 중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이르며 생계, 가사, 양육 책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음
- 212만 한부모 가구 중 4명에 1명은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약속**

- 1세미만 모든 미혼모 / 부와 그 자녀의 경우 자산, 소득,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기초생활 수급자지위를 최대 1년까지 제공 (미혼모부 지원법)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조사 가능
-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강제 위한 제재 강화
  - 해외출국금지 및 운전면허취소 등
- 양육환경개선 및 국가가 부담하는 양육제도 수립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

12 행복을 잇다! | 엄마아빠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현재**

▶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이 부모에 의해 '교육'이란 이름으로 가해진다는 점에서 부모교육, 상담지원 등 근본적 인식을 바꾸는 국가차원 예방책 필요**

- 2017년 아동학대 건수 총 2만 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 6,611명으로 대부분 차지

▶ **어린자녀에게 삼시 세끼를 차려줘야 한다는 부모의 기본적 의무조차 모르는 취약가정이 많으며, 취약가정에 부모의 역할을 가르쳐주는 '부모교육' 이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높이고 있음**

- 2017년 7억 원 투입하여 540여 가구 혜택, 2018년도 7억원으로 건강가정 센터 중 17곳만 사업시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약속**

▶ **취약 · 위기가정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

- 가족행복드림사업 확대하여 부모역할, 양육법 등 상담 지원
- 사례관리 통해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 **혼인신고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건강가정기본법(개)」**



진짜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 어르신

# 행복 100세 시대, 따뜻한 인생의 봄을 안겨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청 설립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 어르신 재산세 대폭 감면(공시지가 3억 원이하)
-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 홀로 어르신 지원 강화
- 중증 와상 어르신 거주 시설부터 자동대소변 처리기 단계적 도입
- 경로당 국가 지원 확대(식사도우미, 주치의제도, 양곡비, 냉·난방비)
-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

자유한국당

01 행복을 잇다! | 어르신

## 노인복지청 설립

**현재**

▶ **2016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 하는 등 한국사회에 급격한 고령화 진행 중**

- 만 65세 이상 인구 725만 7천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4%에 이름. 행안부, 고령화 사회 진입 발표(2017. 8월 기준)
- 고령화 맞춤형 대안 정책 개발 및 집행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약속**

▶ **노인복지청 설립**

- 15개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업무를 일원화해 노인 복지 · 일자리문제 · 안전망 구축 등 정책 총괄

▶ **「정부조직법 (개)」**

02 행복을 잇다! | 어르신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현재**

- ▶ 평균수명의 증가와 조기퇴직의 증가로 노년층 일자리 수요 급속도로 증가
- ▶ 노인들의 취업지원이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 노인 일자리 정책 필요

**약속**

- ▶ **지자체와 고용복지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연계하여 어르신 맞춤형 근로활동 지원 강화**
  -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심의 단편적인 취업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직무교육, 취업 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제도 구축
  - 전국 시 · 군 · 구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확대 설치 및 전문 컨설턴트 배치
- ▶ **노인교육지원법 제정**
  - 100세 시대에 맞춰 어르신 평생교육지원 강화를 통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 ▶ **어르신 특화 공익분야 일자리 발굴**
  - 도서관 구연동화 활동, 이주여성 요리도우미 등
- ▶ **어르신 재능기부 사회 공헌 장려**
  - 사회적 기업, 공공행정분야 등
- ▶ **어르신 통합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창업희망 어르신 대상으로 업종선택 운영 컨설팅, 행정사항 안내, 창업교육 등 통합서비스



03 행복을 잇다! | 어르신

# 어르신 재산세 대폭 감면 (공시지가 3억 원이하)

**현재**

- ▶ 소득이 줄어든 반면, 실제 거주하는 주택 1채만 보유한 어르신들에게 보유세 확대는 경제적 부담이 큼

**약속**

- ▶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유한 공시지가 기준 3억원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재산세 반값으로 감면**
  - 어르신들의 거주 안정, 경제적 부담 줄여드리기 위해 부담없는 수준으로 재산세 감면

04 행복을 잇다! | 어르신

#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현재**

▶ **인구 고령화와 현대사회 스트레스 등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 환자 꾸준히 증가**

- 대상포진 내원환자 2016년 69만 1339명으로 2014년 대비 4만 5천명 증가
- 무더위 시작하는 7~9월, 5060을 중심으로 발병률이 높음에도 비싼 예방접종 가격으로 조기예방 어려운 상황

* 대상포진 : 띠 모양의 발진과 함께 수두를 유발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 수포와 극심한 통증 동반(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며, 접종 후 발병하더라도 통증 현저히 감소)

**약속**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05 행복을 잇다! | 어르신

# 홀로 어르신 지원 강화

**현재**

▶ **1인가구의 고독사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재 통계조사 전무**

▶ **2008년부터 독거노인, 중증 치매, 장애인 등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활용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행 중이나 독거노인 127만 가구 중 약 6.6%만 지원 중이며 장비의 노후화로 데이터 오류 등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많은 실정**

**약속**

▶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 전국 고독사 전수조사 및 고독사 위험지도 작성**

▶ **노후화된 IoT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교체**

▶ **홀로어르신 가구 전체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단계적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 **「고독사예방법안(제)」, 「노인복지법(개)」**

06 행복을 잇다! | 어르신

# 중증 와상 어르신 거주 시설부터 자동대소변 처리기 단계적 도입

**현재**

▶ **와상환자 30만 명에 이르며 이중 중증환자의 경우 배변활동 시 불편 증가**

- 주변에 조력자가 꼭 필요하며 위생적인 처리가 어려워 악취가 발생하거나 욕창발생 빈번, 혼자 처리하지 못해 수치심 유발 우려

▶ **자동대소변처리기는 고가 제품으로 이용률 떨어지며, 현재 복지 용구로 미등록**

- 일본의 경우 복지용구로 지정되어 90% 비용 지원

**약속**

▶ **중증 와상 노인 거주 시설부터 자동 대소변 처리기 단계적 도입**



07 행복을 잇다! | 어르신

# 경로당 국가 지원 확대

## (식사도우미, 주치의제도, 양곡비, 냉·난방비)

**현재**

▶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경로당 양곡비 / 냉·난방비 제외**

- 2018년 정부 예산에서도 편성되지 않은 채 국회 제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

▶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지원 등 경로당 지원확대 필요**

**약속**

▶ **경로당 식사도우미와 주치의제도 도입**

▶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국가지원, 법률에 명문화**

▶ **「노인복지법(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개)」**

08 행복을 잇다! | 어르신

#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

**현재**

▶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전개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통해 제2·3 인생을 준비하는 교육수요 증가, 인생 다모작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 확대 필요

▶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사회의 교육 수요를 적극 수용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재편 지원 필요

▶ 성인 장애인들이 원하는 세분화된 특수 평생교육 부족 (기관수 209개, 프로그램수 629개)

**약속**

▶ 65세 이상 초중등 무상 평생교육 시행
: (가칭) '시니어 누리과정' 신규 도입
-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 기회를 놓친 분들의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평생교육훈련기관의 일정거리내 임차시설 허용 및 평가인정사항(소재지, 과정명, 정원 등) 변경 규제 완화

▶ 3700개 평생교육학습시설을 이용한 전국민 대상 생활과학 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진흥원(시, 도) - 평생학습도시(시, 군, 구) - 행복학습센터(읍, 면, 동)' 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인생이모작 고용과 연계
- 시설내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등 추가 커리큘럼 도입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그룹수업(야학 등) 시 공공시설(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등)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원격교육 확대, 스마트기기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대상 전문가 방문교육, 홈스쿨링, 소규모 그룹지도 프로그램 개설

▶ 「한국장학재단법(개)」, 「평생교육법(개)」, 「장애인특수교육법(개)」 등

# 차별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장애인기본법 조속 추진
- 특수교육과 운영 전국 대학교에 특수학교 설립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 모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서비스
-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 공공 교통수단·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
- 장애인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01 행복을 잇다! | 장애인

## 장애인기본법 조속 추진

**현재**

▶ 장애인 복지 문제와 관련된 '장애인 복지법'만 있고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기본법은 전무. 기본법에 있어야할 내용들이 복지법에 담겨 개정되는 등 법안의 본래 취지 퇴색

**약속**

▶ 장애인기본법 제정

-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국내법에 명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아 법률체계 정비를 통한 장애인 기본권리 확보

▶ 「장애인기본법(제)」

02 행복을 잇다! | 장애인

# 특수교육과 운영 전국 대학교에 특수학교 설립

**현재**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부족**
-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89,353명이나 특수학교수는 174개에 불과(2018년 4월 기준)

▶ **특수학교 확충 필요하나 부지 선정 및 추진 난항**

▶ **현재 강남대, 나사렛대, 대구대 등 부설 특수학교 운영중**

▶ **'17년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67.2%에 그치고 있음**

**약속**

▶ **특수교육과 운영 대학교(현재 39개) 내에 부설 특수학교 설립**
- 특수교육 교사 양성 과정 설치 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비용 국가 전액 지원
- 부지 선정 문제 해결, 특수교원의 안정적 공급 및 해당 학과 예비교사 활용 가능, 특수교육의 질 담보 가능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차적 특수교사 증원 추진**
- 법정정원 확보율을 67.2%에서 90%수준으로 제고



03 행복을 잇다! | 장애인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현재**

▶ **장애상태에 맞는 보조기기 이용 수요가 높음에도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는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 장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 보조기기 지원 현실화 시급**
- 그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은 자부담률이 여전히 높고, 내구연한이 실제 사용가능 기간보다 길어 이용 불편 가중

▶ **정부, 수동휠체어·욕창방석 등에 한해서만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2018. 7~)**

**약속**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부터 지원액 인상 및 내구연한 축소**

04 행복을 잇다! | 장애인

# 모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서비스

**현재**

▶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 3급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활동급여 지원 중(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1등급 1인가구 기준 최대 391시간 수준으로 한달 720시간 감안할 경우 329시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

- 국가지원시간으로 부족해 지자체 상황에 따라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24시간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은 턱없이 부족

**약속**

▶ **24시간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실시**

- 최중증 장애인 대상(1급)



05 행복을 잇다! | 장애인

#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현재**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는 많으나 공급 부족으로 이동권 제한(서울 평균 대기시간 약 40분)**

- 일반인 이용하는 택시대수는 200명당 1.35대 수준, 현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는 일반택시 통계(2013년)에도 못 미치는 실정

**약속**

▶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06 행복을 잇다! | 장애인

# 공공 교통수단·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

**현재**

▶ 현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의무화
-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BF 인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으로 인증률이 낮아 장애인 접근성이 제한됨

**약속**

▶ 공공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07 행복을 잇다! | 장애인

# 장애인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현재**

▶ 장애인 실업률은 2017년 5.8%로 같은 해 전체인구 실업률 3.8%의 1.5배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9%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은 3.2%, 민간기업은 2.9%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고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함

▶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직 중심의 단순반복작업이 대부분이라 영세하고, 근로환경도 열악한 실정

**약속**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 관리감독 강화
-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장애인 고용모델 및 직무개발 연구 지원과 직무 맞춤 훈련 개발

▶ 직업재활시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관리감독 기준 마련

▶ 특수학교 재학 중 취업 연계 및 지원 강화

▶ 장애인 근로지원인·직업생활상담원 고용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여성

# 여성이 행복한 나라, 가족행복의 시작입니다.

-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강화
- 미투 신고 피해자 보호강화 및 2차, 3차 피해 방지 위한 적극지원
-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양성평등 확대

자유한국당

01 행복을 잇다! | 여성

##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강화

**현재**

▶ 2017년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OECD 평균(75.7%)보다 높았으나, 여성은 여전히 OECD 평균(59.3%)에 못 미치는 수준

▶ 만25 ~ 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비율 48.6%

▶ 인구구조 변화, 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른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필요성 증가

**약속**

▶ 여성 4차 산업 인력 양성
- 초·중등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로 소프트웨어 교사 수요가 폭증하나 교원은 부족한 상황,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가 양성
- 농·어업 관련 6차 산업분야의 여성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여성 및 지역 맞춤형 4차 산업 분야 여성 실무인력 양성

▶ 새일센터 내 청년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청년여성경력개발 지원

▶ 재직여성 경력개발 지원으로 경력단절 예방
- 새일센터 내 재직여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 확대 등

▶ 중·고령자 여성 일자리 발굴
- 시니어 아이돌보미 양성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

02 행복을 잇다! | 여성

# 미투 신고 피해자 보호강화 및 2차, 3차 피해 방지 위한 적극지원

**현재**

▶ **여성 법조인의 폭로를 시작으로 미투운동은 문화예술계, 연예계, 종교계를 넘어 정치계까지 확산**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언론의 보도방식, SNS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막무가내 공격, 펜스룰 등 2차 피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

**약속**

▶ **가해자 처벌강화, 피해자 보호강화, 명예훼손 고소 등 역고소 방지 위한 법·제도 개선**

- 가해자 처벌대상 범위 확대 (업무, 고용 기타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영향력 및 실질적 영향력관계까지 포함)
- 가해자 입증책임 전환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 증명
-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형량 및 벌금 강화 등
-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배상)
- 성비위 공직자 징계강화 마련

▶ **학교 및 직장 성폭력·성희롱 교육 강화**

- 학교 성폭력·성희롱 교육 표준안을 양성평등 관점으로 개선
-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자격기준 등)**

▶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 수사기관 담당자 대상교육 확대, 무료법률상담지원 등

▶ **「형법(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 「양성평등기본법(개)」**

03 행복을 잇다! | 여성

#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양성평등 확대

**현재**

▶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16위로 정치분야 92위, 건강과 생존은 76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경제참여와 기회는 123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약속**

▶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공천 확대
- 지방선거 광역/기초 비례대표에 여성·청년 중심으로 공천

▶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시 및 교육과정에 포함

▶ 올바른 성의식 교육강화를 통한 진정한 양성평등교육 실현
- 건전한 성의식과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
- 공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동의 절차 및 성교육 내용에 대한 학부모와 공유
- 성교육 내용에 대해 다수의 학부모 문제제기 시, 공식적인 논의과정을 통한 교육내용 수위 조정

▶ 민간부문의 여성관리직 비율 제고 및 중간관리자 이상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 채용 남녀차별 방지
-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징벌 조항 마련 및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

▶ 「양성평등기본법(개)」



진짜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 「청년안심주택」 및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확대
- 쉐어하우스 거주 청년층, 독립 세대주 권한 부여
-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설치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대출
- 군부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전 부대 확대 배치
- 청년 장병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도입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채용과정의 공정화 및 투명화
- 재도전이 가능한 청년 창업 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법률지원시스템으로 스타트업 지원
- 청년영농 농업생산 기반 지원 등을 통한 10만 청년 창농·귀농 확대
- 국내 관광 발전 위한 청년 대상 국내탐방 지원(꿈찾아발굴단)



01 행복을 잇다! | 청년

##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현재**

▶ 심각한 청년일자리 및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체감도는 낮음

▶ 청년기본법 통과와 함께 여러 부처 및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약속**

▶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지정
- 청년정책예산 확보, 청년사업 조정 등 청년정책 총괄

▶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

▶ 「청년기본법(제)」

02 행복을 잇다! | 청년

# 「청년안심주택」 및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확대

**현재**

▶ **전국적으로 청년층 대상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
-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배려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청년층 대상 주택 공급이 부족

▶ **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생은 약 56만여 명이며 이 중 지방 출신 학생은 약 16만여 명으로 추정됨**
- 지방학생 중 기숙사 이용 학생이 약 30% 추정, 70%는 원룸·하숙·고시원 등에 거주

▶ **국·공유지 부지에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을 통해 연합기숙사 사업을 추진중이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

**약속**

▶ **청년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향후 5년간 매년 5만호씩 공급(총 25만호)**
- 도심내 우수입지(역세권 등) 중심 비교적 교통여건이 양호한 곳 공급
- 지역 및 주거여건 고려해 ▲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형 ▲ 창업수요가 많은지역은 소호(SOHO)형 주거클러스터 ▲ 지방산단에 취업·종사하는 청년을 위한 산단형 주택 등
- 보증금 부담 경감 위해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 보증기관 신용보증서로 대체
- 임대료 부담 경감 위해 주변시세 60-80% 수준으로 공급하되, 거주가능기간 설정(6년내외)해 독점이용 해결
- 공공주택 외에도 청년맞춤형 민간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조치 추진 : 청년소형주택 공급 시 각종 규제 완화, 민간 건축업자에게 세제 및 금리혜택 등

▶ **「행복연합기숙사」 건립 확대 : 향후 5년간 6만명에게 지원**
- 국·공유지를 활용하되 비교적 교통여건이 양호한 곳 중심으로 공급
- 공공기금, 민간기부금(대학기부금 포함), 국고 등 다양한 재원 통해 건립비 확보

03 행복을 잇다! | 청년

## 쉐어하우스 거주 청년층, 독립 세대주 권한 부여

**현재**

▶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쉐어하우스, 코하우징 등 공유주택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공유주택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공유주택의 세대주 설정 등에 대한 기준 미흡

▶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독립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등록이 되지 않아 국민주택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보증금 대출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약속**

▶ 쉐어하우스 거주 청년층에 독립세대주 권한 부여
- 쉐어하우스, 코하우징 등 공유주택에 대한 정의와 기준 설정
- 독립생계를 유지하며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독립세대주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주택 청약신청 자격 부여

▶ 「주민등록법 시행령(개)」



04 행복을 잇다! | 청년

국민정책 아이디어

##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설치

**현재**

▶ 학교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동산 중개 없이 학교 주변 유인물을 통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과도한 수리 비용 청구 등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약속**

▶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설치
- 지자체 혹은 대학교 내에 대학생과 청년층이 자신의 주거 관련 문제를 상담하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담소 설치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

05 행복을 잇다! | 청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대출

**현재**

▶ 현행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여야 함에 따라 채무자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약속**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무이자로 전환



06 행복을 잇다! | 청년

# 군부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전 부대 확대 배치

**현재**

▶ 현재는 상급부대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고 하급부대(대대급)는 배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

-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징후가 있는 병사들이 적지 않으나, 상담사가 배치되지 못한 하급부대에서는 제대로 된 상담이 불가능한 실정
- 2018년 병영생활전문 담당관 신규채용 인원 : 육군14명, 해군 해병 5명, 국직부대 1명

▶ 2012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351명에 달하며 군 전체 사망자(538명)의 65.2%에 달함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전체 인원은 2017년 기준으로 383명이고, 상담관 1인당 병사 1290여명을 담당하고 있어 심도 깊은 상담이 어려움

**약속**

▶ 전 예하부대(대대급 부대)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 우울증 및 자살징후가 있는 병사 집중 케어 및 상담치료 진행 통해 자살률 감소 유도

07 행복을 잇다! | 청년

국민정책 아이디어

# 청년 장병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도입

**현재**

▶ 청년 장병들은 21개월 동안의 군 복무로 인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학업, 기술, 고시, 취업준비 등 배움의 기회와 경력으로부터 단절되고 있음

▶ 군 복무 중인 청년 장병들은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진로와 취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나 지원 등이 부족한 실정임

**약속**

▶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진로를 고민하는 현역 장병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장병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 취업, 창업, 군대 일자리로 구분하여 계급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진행

- 1단계 : 일병 - 상담, 진로 및 직업 심리검사 진행
- 2단계 : 상병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한 핵심 역량 취득
- 3단계 : 병장 - 취업지원 및 면접

▶ 군 복무기간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08 행복을 잇다! | 청년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현재**

▶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15 ~ 29세,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운영 중

- 2012 ~ 2013년 취업자 3년간 소득세 100% 면제,
  2014 ~ 2015년 취업자 3년간 소득세 50% 면제,
  2016 ~ 2018년 취업자 3년간 소득세 70% 면제

▶ 청년층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소득세 감면도 취업연도에 따라 차등화 되어있는 등 취업 유인책은 여전히 부족

**약속**

▶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 소득세 감면제도 2022년까지 연장 및 3년간 소득세 100% 감면으로 일원화

-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음

09 행복을 잇다! | 청년

# 채용과정의 공정화 및 투명화

**현재**

▶ 일부 기업의 불공정한 채용행태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청년 구직자들의 권익보호 필요

▶ 일부 채용공고의 경우, 채용 대상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 발생

**약속**

▶ 청년구직자 권익보호 강화

▶ 구직면접 시 사업주의 갑질금지

▶ 판매조건부 입사 및 공모전 소유권 편취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채용공고 시 임금, 근무시간, 채용일정 등 구체적인 채용정보 명시 의무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개)」



10 행복을 잇다! | 청년

# 재도전이 가능한 청년 창업 환경 조성

**현재**

▶ 창업진흥원의 「2017년 창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창업을 계획 준비하지 않거나 향후 창업의향이 없는 이유로 응답자의 32.6%가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로 답변

- 창업 실패 후 재기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을 막고 있는 요인으로 파악

**약속**

▶ 재창업자 범위 확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재창업자의 범위를 '파산한 중소기업자' 로 확대

▶ 성실실패로 판정된 정직한 기업인들의 재기 지원

- 회생기업과 신생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하여 원칙적 재도전 허용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반영
- 「중소기업기본법」 제 5조 제 3항에 정직한 기업인들의 재도전 기회 보장과 신생기업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

11 행복을 잇다! | 청년

국민정책 아이디어

# 지속가능한 법률지원시스템으로 스타트업 지원

**현재**

▶ **초기단계의 청년창업가들 특허, 계약서 작성, 노사관계 등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음**

- 이미 해외에는 스타트업을 돕는 전문 로펌이 있으나, 국내의 로펌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지원은 일회성에 그쳐 지속가능한 법률지원시스템이 전무한 상황
- 스타트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 사전 예방 및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 필요

**약속**

▶ **정부가 운영하는 '리걸 파트너십 센터' 플랫폼을 구축해 스타트업에게 전문로펌을 매칭**

▶ **매칭 후 6개월간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추후 1회 연장 가능)**



12 행복을 잇다! | 청년

# 청년영농 농업생산 기반 지원 등을 통한 10만 청년 창농 · 귀농 확대

**현재**

▶ **영농 창업 전후 소득 불안정, 자금 · 농지 · 기술지원 미흡 등으로 청년층이 농어촌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전체 농가인구는 40% 감소하고, 65세이상 농가는 증가하는 상황이며, 더욱이 40세미만 청년농업인 비중은 1.1%(2016년)에서 0.4%(2025년)로 감소 전망**

**약속**

▶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생산기반(농지, 농기계, 시설 등) 저가 임대제도 도입**

▶ **청년창업농 법인화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등으로 창농 성장 유도**

- 유한책임회사 농업법인화 및 농림사업 지원 조건 완화
- 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농 경영체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

▶ **영농 경험 축적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시설 조성 및 확대**

▶ **후계 농업경영인 자금지원 확대 및 기간 연장**

- 자금지원 2억 → 3억원
- 거치기간 3년·7년 상환 → 5년·10년 상환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개)」**

13 행복을 잇다! | 청년

# 국내 관광 발전 위한 청년 대상 국내탐방 지원(꿈찾아발굴단)

**현재**

▶ **현재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청년 대상 국내탐방 지원 정책 전무한 상황**

- 국내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제안 등 청년층의 잠재적 능력 발현을 위한 지원 정책 필요

**약속**

▶ **청년 대상 국내탐방 지원 – '꿈찾아발굴단'**

- 청년(만19세 ~ 만29세) 대상 국내탐방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 제안 발굴단 선정,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탐방 자금 지원
- 계획안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탐방목적과 의도 검토, 추가적으로 소득 수준 등 감안해 선정
- 국내 지역별 관광 자원 개발, 관광 연계 산업 및 정책 제안 등의 결과 보고서 제출, SNS홍보 등의 활동 병행
- 청년층의 잠재적 능력 발현을 통한 사회적 기여 · 발전 독려, 새로운 관광지원 개발
- 탐방 기간 및 지역에 따라 최대 150만원 지원 (사업 초기 300명 대상 지원 후 확대)



진짜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확대
-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강화
- 농어촌 지역 결혼 이민자 일자리 마련
- 다문화 가정도 우선 직업교육훈련 대상에 포함
- 다문화 가정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자유한국당

01 행복을 잇다! | 다문화가정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확대

현재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중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기간도 단기간이라는 문제 발생**

- 현재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만을 대상
- 단 10개월 동안만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고, 10개월의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할 수 없음

약속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자격 완화 및 기간 확대로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부진 지원 강화**

-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방문교육 신청시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원기간도 1회(10개월)에서 3회로 확대

▶ **방문교육지도사 역할 강화로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생활 지도
- 가족간 관계 조언 등 결혼이민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한국 적응을 돕는 맞춤 서비스

02 행복을 잇다! | 다문화가정

#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강화

**현재**

▶ **10년 넘게 국내에 장기 정착하는 다문화가정 비율 증가 다문화가족 자녀 대다수가 초등학령에 진입한 상황**

▶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교육과 함께 다문화 존중교육도 필요**

**약속**

▶ **다문화가정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 확대**
- 학생·학부모를 포함하여 다문화 가족의 학습 및 정서안정 지원
- 가정-지역 연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조속히 안착 도모

▶ **중도입국자녀와 다문화 중고등학생으로 정책 대상 확대**
- 찾아가는 예비학교(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집중지원) 운영 확대로 공교육 진입·적응 지원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확대**
-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 및 지역 주민의 다문화 친화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확대

▶ **다문화 자녀 다양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 리더십 개발,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성장 프로그램 '다(多)재다능' 확대
- 청소년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확대



03 행복을 잇다! | 다문화가정

# 농어촌 지역 결혼 이민자 일자리 마련

**현재**

▶ **상당수의 결혼이민여성이 농어촌에 정착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음**
- 월 평균 가구소득 100-200만원 미만이 38.6%, 50-100만원 미만이 16.4%, 50만원 미만이 5.1%
- 농어촌 지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 필요

**약속**

▶ **농어촌지역의 새일센터 내 결혼 이민 여성 전담 취업설계사 추가 배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기초 소양교육, 원어민강사 양성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교육으로 취업 연계 강화**

04 행복을 잇다! | 다문화가정

# 다문화 가정도 우선 직업교육훈련 대상에 포함

**현재**

▶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및 일자리 연계 고용지원 부족**

**약속**

▶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에 추가**

- 결혼이민자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 제도 강화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



05 행복을 잇다! | 다문화가정

# 다문화 가정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현재**

▶ **문화다양성 기반 사회통합 지원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되어 매년 지원 확대, 2017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25개 기관, 226,321명 참가**

※ 무지개다리 사업이란?

-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주민)이 능동적 문화주체로서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공연 · 전시 등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교류를 지원하는 사업

**약속**

▶ **지역과 다문화 구성원의 특성 고려한 무지개다리사업 지원 강화**

- 도서관 · 박물관 · 문예회관 · 문화원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 중심으로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 간 소통 · 교류 지원 확대**

-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원로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등 문화예술전문인력의 재능나눔 문화 조성 및 지원 확대
- 문화예술전문인력과 다문화 구성원 간의 소통과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06 행복을 잇다! | 반려동물

#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친화 정책 확대

**현재**

▶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펫팸(Pet+Family)' 1천만 시대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 확대 추세

▶ **반면,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활 속 불편함을 호소하는 현실도 비등**

**약속**

▶ **동물진료비용 부담완화 및 동물병원 선택권 확대**
- 진료비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가격정보 공시제 도입
- 진료비 표준화 추진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지원(가입대상 및 진료보장범위 확대 등)

▶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문화 확산**
- 페티켓(Petiquette) 고양을 위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확충

▶ **맹견 등 위해동물 관리감독 강화**
- 사육시 선진국 수준의 사전허가
- 정기적인 위험행동 평가 등 실시

▶ **「동물보호법(개)」, 「수의사법(개)」 등**



진짜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3

## 대한민국의 새로운 물결로
# 미래를 잇다!

혜안의 정치로 역동적 경제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 기업·4차산업·일자리

#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69만 일자리 창출
- 법인세 인하
- 신(新)중년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 컨설팅
-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 4차 산업 육성
-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확대
- 산학연 지원 확대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수도권 낙후지역의 과도한 규제 합리화로 국토 상생발전 추구
- 문화 콘텐츠산업 활성화 위한 세금 공제 확대
- 최저임금제도 혁신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원전안전국가, 원전안전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자유한국당

01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69만 일자리 창출

**현재**

▶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 2배 가량 높음에도 불합리한 규제와 낮은 생산성으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상황**

* 취업유발계수 : 서비스업 16.7명 > 제조업 8.8명
(2014년 기준, 한국은행)

▶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2030년대, 1%) 을 전망하며 성장률 저하의 주요인으로 서비스부문에서의 생산성 저하 등을 지목**
**(2017년 한국연례협의 결과보고서, 2018. 2. 18)**

**약속**

▶ **서비스업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과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서비스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특성화 교육 강화
-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R&D 기반 강화 및 자금·세제·구매·판로 확대 등 지원 근거규정 마련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제)**

- 보건 및 사회복지·교육·관광·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향후 69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02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법인세 인하

**현재**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국제 추세에 역행하여 작년 말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22% → 25%로 대폭 인상

*(예) 美 : 2018년부터 35% → 21% 인하 / 英 : 2020년까지 19% → 17% 인하 추진 / 日 : 20%까지 인하 방침

▶ 현재 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단일세율이고, 4단계 누진구조를 가진 곳은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2개국 뿐

▶ 최고세율 1%p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 하락 우려

**약속**

▶ 현행 4단계의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표구간별 2 ~ 5%p 인하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 **200억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8% |
| **2억원 초과** | **20%** |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세율 조정 : 과표구간별 2%p씩 인하
*100억 초과 구간의 경우 현행 유지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으로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 및 투자 여력 확대, 해외자본 유출 방지 효과

## 03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신(新)중년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 컨설팅

**현재**

-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생계형 자영업자로 대거 유입되고 있지만, 경영노하우 부족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와 잇단 폐업에 직면
- 재취업준비를 하지 못한 신(新) 중년들이 뒤늦게 고용훈련을 받고 취업시장에 뛰어들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

**약속**

- 전국 시 · 군 · 구 단위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확충 및 전직 · 재취업 전담 컨설턴트 배치
- '찾아가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
  - 지자체와 민간기업 연계
- 창업희망자에게 소상공인 창업교육과 연계한 반퇴교육 및 재창업 희망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04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현재**

- 지역이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특화발전을 추진하려 해도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되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움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역 클러스터화를 통한 성장 활로 모색에 도시와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거점 활성화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예) 실리콘밸리(美), 소피아 앙티폴리스(佛), 중관춘(中), 도쿄(국제비즈니스), 간사이(의료), 니가타(농업) 등

**약속**

-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별 규제 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유형별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개선시스템 도입
  -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신산업 업종인 자율주행차, 드론, 전기차, IoT융합도시 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
-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지원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 제정 추진
- 지역 내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특별법 통과시 향후 5년간 지역 내 1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05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4차 산업 육성

**현재**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융복합 기술 및 서비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및 칸막이 규제, 시장과 법제 사이의 괴리 등으로 급격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하는데 한계**

※ 세계 경쟁력 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정부 규제에 따른 부담" 부문(138개 국가 중 105위)

**약속**

▶ **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 특례(포괄적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 벤처 창업 기업이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규제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제도

▶ **일자리 4.0, 전 국민의 평생 일자리화**
**: job mining (일자리 만들기)**

▶ **네거티브규제 기반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인허가위원회' 설립**

▶ **「신산업 규제완화 특별법(제)」, 「4차산업혁명 일자리특별법(제)」**



06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확대

**현재**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G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

- 5G가 AI,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연관 기술의 진화와 결합되어 산업혁신 견인

▶ **최근 기업의 법인세율이 25%(종전 22%)로 인상되고, 차세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등 민간의 투자 여력이 감소되고 있음**

- 특히, 5G로 대변되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구축은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 수익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위축되는 문제점 발생

**약속**

▶ **5G망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 부여**

▶ **4차 산업혁명 기반 시설 세액 공제 신설**

- 현행 조세특례법 제25조의 5(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세액 공제) 개정
- 4차 산업혁명의 토양이 될 5G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세제 지원시 ICT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가능

▶ **「조세특례법(개)」**

07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산학연 지원 확대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현재**

▶ **블록체인은 산업 전반을 혁신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음**

- 최신 금융서비스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활용, 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 예산집행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복지수당·기초수급의 운영 효율화 제고, 원산지 추적을 통한 제품 신뢰성 강화, 디지털콘텐츠의 P2P유통과 스마트 계약에 의한 저작권 보호 등

▶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시범사업, 핵심기술개발, 교육 등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진척도가 더디며, 구체적인 개선안은 없는 실정**

**약속**

▶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정비**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상법」 등 기존 법령과 충돌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개선안 마련
- 분산저장·공유가 핵심인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 전반의 정비 추진

▶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정책적·산업적 활용을 기할수 있는 인력양성 및 지역블록체인지원연구센터 설립 검토

▶ **시장진출 지원 강화**

- 산학연 공동연구,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 강화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 선진국과의 협력·교류 강화, 해외실증사업 추진, 글로벌 공동 브랜드 육성

▶ **다양한 지역 단위의 정책 프로젝트 확대·공유**

- 지역단위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프로젝트 추진 확대

*(예)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대상 선정 등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개)」, 「전자금융거래법(개)」, 「개인정보보호법(개)」, 「전자서명법(개)」, 「상법(개)」**

08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현재**

▶ **2005 ~ 2015년까지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해서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110만 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7만개에 불과**

- 2015 ~ 2016년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6.6%로 국내투자 증가율 3.3%의 2배, 같은 기간 제조업 분야 해외생산 의존도는 12.8%에서 19.2%로 급증. 이들 기업의 해외인력만 300만명 이상

**약속**

▶ **국내복귀 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 기반을 안정시키고 수익 창출과 고용 증대에 힘쓸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지원대상 확대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에만 금지된 '부분복귀'를 지방에 제한적으로 허용
- 세제혜택 강화 : 국내복귀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기간 연장(최대 10년) 및 법인세 최고세율(25%) 적용 3년 유예

*완전복귀 : 8년간 100% + 2년간 50%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현행 5년 + 3년)

*부분복귀 : 5년간 100% + 2년간 50%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현행 3년 + 2년)

▶ 「조세특례제한법(개)」



09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수도권 낙후지역의 과도한 규제 합리화로 국토 상생발전 추구

**현재**

▶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돼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조정 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약속**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3개 권역을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

- 현행 권역별 규제 → 소규모 단위 지역분류에 따라 세분화
-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적극 지원

▶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보전관련법(제도)간 상호충돌과 중복규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권역별로 자연보호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제를 통해 수도권 전체 삶의 질 향상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 「수도권정비계획법(개)」

10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문화 콘텐츠산업 활성화 위한 세금 공제 확대

**현재**

- ▶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액공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R&D 세액공제 혜택 미미한 실정**
- ▶ **방송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공제 수혜대상 감소**
  - 수혜대상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에 한정, 오락장르, 해외포맷수출 프로그램 등은 배제됨
- ▶ **문화콘텐츠 수출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관련 직·간접비를 제외하고 있어 전체 외국납부세액 중 상당액 유실**

**약속**

- ▶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R&D 세액공제 개선**
  - 문화콘텐츠산업의 기획(창작) / 개발 관련 사전제작비용을 대상비용으로 포함
  - 영상콘텐츠 기획개발비용은 연구소와 관련 없이 R&D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
  - 방송법 상 오락 장르까지 확대
- ▶ **문화콘텐츠 수출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중소제작사 제작비용 및 투자사 수익 정산금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 **「조세특례제한법(개)」, 「법인세법 시행령(개)」**



11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최저임금제도 혁신

**현재**

-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 ▶ **최저임금 인상을 진행한 정부 내부에서도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
- ▶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농어업인, 청년층, 취약업종 종사자 등에 혼란을 야기해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

**약속**

- ▶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상률 결정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
  -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 보고서 제출 의무화
- ▶ **현행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 ▶ **「최저임금법(개)」**

12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현재**

▶ **창업 · 중소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 대상기업의 제한 등 규제 완화 조치 필요**

※ 업력 규제(7년 이하의 창업 기업) 적용, 예외적으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 제한적 허용

**약속**

▶ **크라우드 펀딩 업력 규제(창업 이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완화, 투자대상 중소기업 확대**

▶ **기업당 크라우드 펀딩 모집 한도(현행 7억) 확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 및 시행령(개)」**



13 미래를 잇다! | 기업 · 4차산업 · 일자리

# 원전안전국가, 원전안전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현재**

▶ **원전안전 강화 및 원전 관련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

**약속**

▶ **원전안전관리산업벨트 개발로 장기가동 원전안전 확보**

▶ **장기가동 원자력해체연구원 설립으로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우리나라 원전 해체기술은 원전 해체 경험 국가의 70% 수준으로 원전 해체에 필요한 총 96개 기술 중, 아직 미확보된 28개 기술을 개발 추진하여 부가 가치가 높은 원격 해체 장비 IT 융합 장비 등 해체 공정 장비 개발

▶ **지진에도 끄떡없는 원자력 안심국가**

-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등 안전시스템 획기적 개선
-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민과 소통하는 안전문화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 촉구
- 노후 1톤 경유트럭을 LPG 트럭으로 교체시 300만원 지원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 영유아·노약자 이용시설부터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 미세먼지 측정기 재설치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로 미세먼지 저감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 「환경친화적 선박법」 제정 및 지원금 확대
- 선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AMP(육상전원공급설비) 확충

자유한국당

01 미래를 잇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 촉구

**현재**

▶ 현재 환경부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의 국외 기여율은 약 38 ~ 57%라고 파악하면서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소극적 대처로 일관

▶ 국민 다수가 중국에 너무 저자세가 아닌지 문제 제기 및 적극적 대처 주문

**약속**

▶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보상 요구
- 중국은 82년 UN 해양법 협약 제 194조 2항 및 국제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 위반
- 양국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 통해 중국에 피해 보상 요구

▶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 강화

02 미래를 잇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노후 1톤 경유트럭을 LPG 트럭으로 교체시 300만원 지원

**현재**

▶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인중 경유차 점유율 23%**

-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부문에서 경유 화물차 비중 60%, 미세먼지는 직접 배출량(1차 배출, 27%)보다 간접배출량(2차 배출, 73%)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한미 NASA 공동연구 결과, 2017. 7)

**약속**

▶ **노후 경유 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교체 시 최대 300만원 지원금 지원**

- 1톤 트럭을 많이 소유한 소상공인의 신차 구입 부담 경감

▶ **「친환경자동차연료 보급 촉진에 관한법(제)」**



03 미래를 잇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현재**

▶ **국내 자동차 2,252만대 중 경유 자동차가 957만대 (42.5%)이고, 이중 262만대(27%)가 저감대상 노후 경유차** ('17. 12월 기준)

- 전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물질 양의 57%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
- 특히, 11년 이상 연식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신차 대비 22배에 달하는 만큼 수도권을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유도가 시급

**약속**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조치했을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8~11배 추가 감축 효과

▶ **「조세특례제한법(개)」**

04 미래를 잇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영유아・노약자 이용시설부터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현재**

▶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 보육실 (17만 8,185개) 중 공기청정기 설치 된 곳 60.4%(10만 7,613개), 노인요양시설 전국 5,258개 중 1,228개(23.3%) 설치 불과

**약속**

▶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마스크 지급 및 공기청정기 설치
- 어린이집, 경로당 시설부터 단계적 실시



05 미래를 잇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미세먼지 측정기 재설치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현재**

▶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화되면서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
-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외 공기질 관리 필요

▶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망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미흡한 실정

**약속**

▶ 미세먼지 측정기 재설치
- 미세먼지 측정망 전수조사 실시
- 측정기 설치 높이 현실화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인증제 도입

▶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 관리
- 지하철 역사에 사람 코높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확대
- 미세먼지 측정 시 시설별·연령별·대상별 차등 기준 마련
- 지하철 흡·배기구 높이 상향,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도입

▶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위한 집중 연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06 미래를 잇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현재**

▶ 잦은 미세먼지 경보 · 주의보로 학생 및 학부모 불안 가중

▶ 미세먼지로 인해 유아 · 학생 야외 체육 활동 기피, 심각한 운동 부족 현상 초래

**약속**

▶ 전국 모든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공기청정기 필수 설치

▶ 공기청정기(렌탈형 포함) 보급
- 교사 · 학부모의 관리 부담 경감, 전문가의 정기적인 공기청정기 관리를 통해 효율적 · 안정적 공기청정기 운용 지원
- 전기료, 필터 등 운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노후 출입문, 창문 전면 교체

▶ 초 · 중 · 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의 설립 확대 및 개 · 보수
- 미세먼지 악화로 인해 운동장에서의 체육 및 실외 활동 어려움에 따라 학교 실내 체육관 신설 및 증축, 보완

▶ 미세먼지 경보 등 긴급상황 대비 미세먼지 마스크 비축 · 배포 지원
- 갑작스러운 미세먼지 악화 시 착용 가능한 비상용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07 미래를 잇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로 미세먼지 저감

**현재**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석탄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전국 미세먼지의 15%를 석탄발전소가 배출

**약속**

▶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30년 이상된 석탄발전 봄철(3～6월) 가동중지
* 현재 폐지일정 (2019년 1월) 1기, (2019년 12월) 2기, (2021년 1월) 2기, (2022년 5월) 2기

▶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강화
- 현재 최저 오염물질 배출 발전소인 영흥화력 배출기준 수준까지 강화

▶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속 추진
-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성능 집진 기술, 질소산화물 저감 신 촉매, 탈황 기술 등

08 미래를 잇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전기차 · 수소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현재**

▶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 3만 대 이상 전망, 지난해 약 1만 3,826대(수소차 포함) 판매 감안하면 2배 넘는 성장 속도

▶ 정부 책정 전기차 보조금 예산 약 3,590억 원으로 총 2만 8,000대 규모이며, 올해 1,100여대 판매 전망 수소차 보조금은 지난해 이월금 포함해도 240대 분량에 불과한 실정

▶ 트럭과 버스 등 전기상용차에 대한 지원 확대로 환경 개선 및 전기상용차 시장 활성화 조성 필요

**약속**

▶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 원활한 운행 기반 구축 위해 전기차 충전소 확대



09 미래를 잇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환경친화적 선박법」 제정 및 지원금 확대

**현재**

▶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20년부터 전 세계 해역에 대해 선박 배출 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SOx) 배출 허용량을 현행 3.5%에서 0.5%로 낮출 예정으로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국내 해운업계는 환경 친화적 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약속**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환경친화적 선박 육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환경친화적 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 시책 수립 · 추진 (스마트 친환경 선박, 전기 선박, 자동화 선박 등)
-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 개조 또는 조기폐선 등 권고 및 필요한 자금 등 지원
-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 등을 개발 · 생산 · 공급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 지원

▶ 환경친화적 선박 제조 등을 위한 지원금 확대
- 한국해양진흥공사 2018년 7월 개소 예정
- 자본금 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

* 「한국해양진흥공사법(개)」

▶ 국가 필수 해운제도 도입 추진
- 원유 · LNG · 석탄 · 철광석 등 전략 물자 국적선 적취율 확대

10 미래를 잇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선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AMP(육상전원공급설비) 확충

**현재**

▶ 선박 연료유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부산·인천 등 항만도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음

▶ 선박연료인 벙커C유의 황 함유비율은 3.5%로 자동차의 경유 0.001% 보다 월등히 높음

**약속**

▶ AMP(육상전원공급설비) 단계적 설치 확대로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오염 감축 지원

- 선박은 조명, 냉동고, 공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디젤 엔진으로 생성하는데, 이때 연료유(벙커C유)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됨

- IMO(국제해사기구) 선박배출가스 규제 협약으로 AMP는 美 LA항, 로테르담항 및 유럽 선진항만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부산 · 인천 · 울산항만공사 등에서도 AMP 구축계획 발표 및 설치 예정으로 조속한 설치 지원과 다른 항만에도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

▶ 「항만법(개)」



진짜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 안전한 대한민국

# 국민행복의 근간,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의료기관, 노인·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화재 안전관리 강화
- 흔들림 없는 지진 안전대책 추진
- 재난피해 복구지원 확대로 피해주민의 조속한 재기 지원
- 첨단기술과 융합한 한국형 재난안전제품 개발
- 생활안전 문제해결에 과학기술 활용
- 경찰·소방공무원 보수 및 위험 수당 인상
-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범죄취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강화
- 흉악범죄자 처벌 및 관리 강화
- 타워크레인 등 현장근로자 안전망 확충
- 수요자 맞춤형 전문 기상방송 및 재난방송 제작
- 종합병원 전담약사 배치로 환자 약물안전 강화
- 위해우려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 병원 위급상황 발생 시 중환자실 환자 즉시 전원조치
-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화생방대피소 건립 및 방독면 보유로 국민생명 보호

자유한국당

01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의료기관, 노인・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현재**

▶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는 건물 층수 및 바닥면적 합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소병원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 발생

▶ 환자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필요

**약속**

▶ 의료기관, 노인·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 국가가 스프링클러 설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

02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화재 안전관리 강화

**현재**

-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건축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관할 소방서 등의 설계도면 공유 필요
-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2012 ~ 2016년) 총 236건에 피해액은 502억 원에 달하고, 화재 발생 시에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는 경향이 커 화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약속**

- 관할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시설 설계도를 미리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주택 밀집지역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등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 확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훼손하는 화재안전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과태료 → 형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



03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흔들림 없는 지진 안전대책 추진

**현재**

-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 지진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나, 지진에 대비한 전문적 조사·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 최근 2년간 국내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건수는 476회(2016년도 252회, 2017년도 224회)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을 2층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전체 건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루어진 건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하고(2017년 10월 기준), 지진 피해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큰 피해 우려

**약속**

- 필로티 건물 등 민간건물 내진보강 유도 강화
  - 지진안전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에 부착하는 지진안전인증제 조기 시행
  - 민간건물 내진보강 시에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직접지원제도 단계적 도입
- 지진대피소 지정 확대 및 인터넷을 통한 위치정보 실시간 제공
-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조속 추진
- 동해권에 지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위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추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04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재난피해 복구지원 확대로 피해주민의 조속한 재기 지원

**현재**

▶ 최근 빈번한 재해 발생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구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

**약속**

▶ 지진으로 인한 파손 주택 복구비 지원 확대
(상한액 3천만원 → 3억원, 국고보조율 30% → 80%)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시설물에 대한 재난보험 도입

▶ 재난피해가 큰 소규모 읍·면·동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선
(시·군·구 → 읍·면·동)

▶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기간 연장

▶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 「풍수해보험법(개)」



05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첨단기술과 융합한 한국형 재난안전제품 개발

**현재**

▶ 최근 다양한 안전사고와 재난, 대형 화재 발생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안전기술의 발굴, 개발, 판로 지원체계 등 제도적 근거가 없어 국민안전을 위한 기술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

※ 국내 소방·재난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미국) 대비 72% 수준이며, 특히 미래·특수재난에 대비한 기술수준은 상당히 미흡

▶ 중소기업 등에서 우수한 안전기술을 개발해도 마케팅, 홍보, 우수성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어 판로에 어려움 호소

**약속**

▶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안전산업진흥법(제)」

▶ 첨단기술과 융합한 한국형 재난안전제품 개발 및 보급
- 생존배낭, 영유아용 캡슐형 방독면, 방사능·화재·미세먼지 등 다기능성 방독면 개발 등

▶ 재난안전제품 및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06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생활안전 문제해결에 과학기술 활용

**현재**

▶ 과학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재해, 기후변화, 질병, 자원 부족 등 인류 차원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실생활 적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약속**

▶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스마트드론' 활성화

▶ 드론 신호등, 드론 조명 활용 확대

▶ 졸음운전 예방 위한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 기술 적용 확대

▶ 휴대전화로 사고 위험 예측, 예보 서비스 확대

▶ 지능형 CCTV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예방 강화



07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경찰 · 소방공무원 보수 및 위험수당 인상

**현재**

▶ 상시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 소방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간에 보수 차이가 거의 없고, 화재진화수당도 10년간 동결상태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의 노후 심화

▶ 위험직무 공무원의 트라우마 발생빈도가 높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

**약속**

▶ 위험성과 책임성이 높은 직무 특성에 걸맞도록 경찰 · 소방공무원 보수 인상
-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일반직 대비 약 5% 우대)
- 화재진화수당 현실화(월 8만원 → 20만원)

▶ 경찰 ·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낡고 부족한 장비의 현대화 추진
-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찰 장비의 첨단화 추진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의 장비 현대화 등에 사용

▶ 위험직무 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 「공무원 보수규정(개)」, 「지방교부세법(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개)」

# 08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범죄취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강화

**현재**

-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 범죄 대응 활동이 사후 검거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 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

**약속**

- 주민 의견이 반영된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범죄예방디자인(CPTED) 추진
- 범죄사각지대에 고화질 CCTV 및 안전벨이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대
- 자율방범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 지원
-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을 전담하는 학대전담경찰관 전국 배치 확대(495명 → 1000명)
-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지원센터 전국 설치 확대 (11개소 → 18개소)
-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개)」



# 09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흉악범죄자 처벌 및 관리 강화

**현재**

- 아동성폭행으로 12년 형을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등 흉악범죄자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 확산
- 연쇄살인, 아동성폭력범, 성폭력 재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별도 수용하여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 보호 필요

**약속**

- 흉악범죄자 격리수용제도 도입
  - 형기 종료 된 연쇄살인, 아동성폭력범, 성폭력 재범 등 흉악범죄자를 일정 기간 별도 수용하여 관리 감독하며 사회 복귀 지원
  - 흉악범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선량한 시민보호
- 「보호수용법(제)」

10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타워크레인 등 현장근로자 안전망 확충

**현재**

▶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2~3배 수준**

▶ **특히, 타워크레인 사고가 2016년부터 급증 추세**

**약속**

▶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 강화**
-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총괄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정기적인 안전보수교육과 적성검사제도 시행하여 면허 재발급 관리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전문 인력 양성
- 크레인 부실검사 방지하여 설비 안전성 관리 강화
- 크레인 검사기관 지도감독 규정 신설 및 중고 수입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도 도입
- 노후장비 관리 위한 설치 전 검수와 장비 검사항목 세분화 및 검사 실명제
-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평가

▶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청 승격**

▶ **업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현장 근로감독 단속 및 패널티 강화**

▶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교육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

▶ **「산업안전보건법(개)」**



11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수요자 맞춤형 전문 기상방송 및 재난방송 제작

**현재**

▶ **우리나라 기상이 점점 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변해가고 있으나, 부실한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해 기상방송을 자체 제작하는 상황**
- 지방방송의 경우 녹화시스템이 대부분으로 시간적 격차로 인해 최신 기상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기상정보의 신속 전달이 어려운 상황

▶ **현재 기상청에서 동네별 예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전문방송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지역별 동네별 날씨를 신속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성 증대**

**약속**

▶ **기상정보를 지역민의 시각에서 해석한 지역맞춤 생활밀착 전문 기상방송을 제작,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 기상변화에 따른 관광 맞춤형 정보, 해양 맞춤형 정보, 농업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하여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재해재난, 안전사고를 예방
-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예보로 예보 신뢰성 확보
- 방송을 통해 지진 등 재난대응 및 대피요령 전파

▶ **「기상법(개)」**

12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종합병원 전담약사 배치로 환자 약물안전 강화

**현재**

- 실제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나 전공의에 의해 약물오류 발생, 처방오류, 투약 오류 빈번
- 정작 약사는 조제 업무만 담당, 의약품 구매 보관, 처방검토, 모니터링 등 약사 업무에서 배제

**약속**

- 종합병원 전담약사 배치
  - 환자의 약물(투약·처방 등) 안전 강화
- 「환자안전법(개)」



13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위해우려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현재**

-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181건에 이르는 등 국민안전 위협 증가 추세
- 위해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워 매년 부적합 위해제품이 증가하여 국민 불안 가중

**약속**

-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 안전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받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위해화학물질 검출 시, 회수대상 제품 적극 회수 및 홍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

14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병원 위급상황 발생 시 중환자실 환자 즉시 전원조치

**현재**

▶ 이대목동병원 사건 발생 시, 응급상황 발생에도 불구하고 환자 전원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긴급한 상황에도 일부 신생아 감염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16시간 동안 방치

**약속**

▶ 위급상황 발생 시 중환자실 환자 즉시 전원조치
- 병원내 위급 상황 발생 시 (천재지변, 감염병의심상황, 집단사망사고 등) 보호자 동의 없이 타 의료기관 전원조치로 환자 안전 우선

▶ 「의료법(개)」



15 미래를 잇다! | 안전한 대한민국

#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화생방대피소 건립 및 방독면 보유로 국민생명 보호

**현재**

▶ 북한의 핵 개발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화생방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국내 대피소는 접경지역에 설치된 단 4곳에 수용인원은 1,800여명에 불과
※ 스위스가 1963년부터 핵 방공호 건축을 의무화해, 인구의 114%가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준비된 것과는 대조적

▶ 민방위대원을 위한 방독면 보유율도 30% 이하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을 위해 준비된 방독면은 전혀 없는 상황

**약속**

▶ 실전 중심의 국민참여형 핵 공격 대피훈련 정례 실시
- 대피소 찾기, 방독면 착용 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훈련

▶ 화생방대피소 건립 확대

▶ 화생방을 대비한 방독면 등을 민방위 대비물자에 추가하고 대피소에 비치 확대

▶ 「민방위기본법(개)」

◉ 든든한 안보·당당한 외교

# 굳건한 안보체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대응 외교력 강화
-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 구축
- '대북 퍼주기'를 막고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시대 개막
-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 사병 장애보상금 현실화
- 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군인 정년연장 적극 추진 및 전역 후 일자리 확대
- 참전 명예수당 50만원으로 인상
- 예비군 훈련수당 5만원으로 현실화
- 보훈회관 건립 및 제3현충원 조성
- 안보희생지역(접경지역)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 탈북민의 분단고통 치유를 위해 적극 노력
-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외국 방문 지원

자유한국당

01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대응 외교력 강화

**현재**

▶ 북한은 지난해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 단행

▶ 북한은 "핵타격 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 이라며 남한에 대한 핵사용 위협 (2013. 3 로동신문)

**약속**

▶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 달성

▶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추진

02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 구축

**현재**

-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안보위기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 필요
- ▶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필요성 대두
- ▶ 김정은 집권기간 중 핵무기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SLBM시험발사 성공, 위협적인 화생무기 능력보유, 초강력EMP공격 능력 보유

**약속**

- ▶ 국제공조를 통해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비핵화 추진
- ▶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비 전력 확충 및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제·대응능력 발전
  -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 구비, 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 핵심지역 파괴를 위한 고위력 타격 전력(KMPR) 확보
  - 한미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사일 대응능력 · 태세 발전
  - 북한 핵 · 화학 · 생물 위협 대응관련 한미협력 강화
  - 북 SLBM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 북한의 EMP공격 대비해 방호 대책 구축(국방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확대 구축)



03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대북 퍼주기'를 막고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시대 개막

**현재**

- ▶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일방통행식 추진,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전에 대북제재 완화 우려
- ▶ 안보교육을 대폭 축소하고, 이념교육에 치중하여 균형잡힌 '통일교육' 부재

**약속**

-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없는 대북 지원 반대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목표로 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행동 vs. 행동' 원칙과 연동된 교류협력을 추진
- ▶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안보교육의 추진
  - 청소년 통일체험 활동 등 학교 교과과정 전반에서 통일교육 추진
  -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 ▶ 통일준비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기반 조성
  - 다양한 통일사업 주체들이 이념을 초월하여 협력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 구축
  - 의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통일외교역량 강화
- ▶ 남북 협력기금 등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감시 및 견제 강화

04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현재**

- 국군장병들의 생활공간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복무여건환경 개선 필요성 대두
- 불량산업업체근무 산업기능요원의 산재사고 발생
- 군대 내 성폭력방지 필요성 증대
- 군복무 기간이 학업의 계속성을 살리고 자기개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원 필요

**약속**

- 군대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처벌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훈련소 군 내무반을 침대로 전면교체
- 군 급식 식재료 반입·조리과정 검수 강화 (불량전투식량급식업체 적발시 퇴출)
- 기능성 방한복 등 고품질 피복 및 장구류 보급
- 환산재해율 높은 불량병역지정업체 즉각 퇴출
-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 확대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부여 등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확대



05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사병 장애보상금 현실화

**현재**

- **현행법에 의하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 · 부사관 후보생이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은 555만원 ~ 1,667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실정**
  - 2016년 7월, 철원 지뢰 폭발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김상병의 경우 802만원의 장애보상금이 전부
- **반면 직업복무 중인 군 간부는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등 보상을 받고 있어, 보상사각지대에 놓인 사병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약속**

- **군 복무 중 사병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현실적인 금전적 보상을 통해 보상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병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
  -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
  - 보상 지급 기준을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세분화하고 보상 배율도 상향 조정

※ 장애1급 기준 최대 지급 장애보상금 비교 (2017년 기준)

| 현행 | 자유한국당의 약속 | |
|---|---|---|
| 1,667만원 | 일반장애 | 4,590만원 |
| | 특수직무 공상 | 8,619만원 |
| | 전상 | 11,475만원 |

06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현재**

-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 인력과 시설 미흡
- 열악한 군 의료시설(병원 수, 인력, 장비 부족)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병사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

**약속**

- 병사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및 민간병원 협업 진료 확대
  - 현재 군병원 의사 소견서 필요하나, 군의관 소견서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전면실시
- 국군외상센터 건립 등 군 병원 전문화
- 숙련된 전문의료진 배치로 군병원 진료 능력 개선
- 의료장비 보강 및 신속한 의무후송체계 구축
  - 응급환자 후송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07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군인 정년연장 적극 추진 및 전역 후 일자리 확대

**현재**

- 직업군인의 경우 1993년 연장된 정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핵심인력 조기 유출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 유발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년 평균 7천여 명이 전역하지만 2012~2016년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0% 안팎임
  - 특히 상이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들의 상실감이 매우큼

**약속**

- 대령이하 장교, 준·부사관의 계급정년 연장을 추진하여 군인 직업성 보장
- 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교육 통해 조기취업 확대,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조직 확대
- 상이군인의 경우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수사를 위한 일련의 작업) 교육을 통해 온라인상의 여성,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수사·단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 「군인사법(개)」

08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참전 명예수당 50만원으로 인상

**현재**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예우 부분은 아직도 보훈가족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실정임

▶ 참전명예수당 인상으로 합당한 예우와 지원 필요

**약속**

▶ 참전 명예수당 인상으로 명예로운 보훈 강화
- 현행 30만원 → 50만원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
※ 2018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원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



09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예비군 훈련수당 5만원으로 현실화

**현재**

▶ 동원 및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이 실소요경비(평균 2만 2천원)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비에 대한 불만 및 부담 가중
- 現 예비군훈련비 1일 1만 3천원, 동원훈련비 1만 6천원

▶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대부분은 주로 20 ~ 30대로서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을 받고 있어 실비수준의 보상 필요

**약속**

▶ 순차적 증액을 통해 2021년까지 1일 5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추진

▶ 「병역법(개)」, 「예비군법(개)」

10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보훈회관 건립 및 제3현충원 조성

**현재**

-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는 18만명으로 이중 75세 이상 고령자가 5만명(27.8%)을 차지하는 등 안장 수요 또한 증가 추세
  ※ 국립묘지 : 국립 현충원(서울, 대전),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국립민주묘지(4.19, 3.15, 5.18)
- 낙후되어 불편한 보훈시설 개선 및 현충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필요

**약속**

- 지방 보훈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E/V 등) 지원
- 수도권 북부권역 제3현충원(국립묘지) 조성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



11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안보희생지역(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현재**

-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접경지역 등에 대한 제한과 규제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과거방식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군사작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축행위 및 고도제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약속**

- 수도권 접경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선별적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 유도
- 제한보호구역의 군사분계선부터의 제한거리 조정 (군사분계선 이남 25km → 15km)
- 사격장 · 훈련장 주변에 방음벽 및 방호벽 설치 의무화
-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및 기업유치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 남북간 경제적 교류 및 협력 증대를 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
- 안보희생지역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지원단 설치 · 운영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개)」, 「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 「수도권정비계획법(개)」 등

12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탈북민의 분단고통 치유를 위해 적극 노력

**현재**

▶ 국내 입국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서면서 新이산가족이 형성됨에도, 정착 지원에만 초점이 집중되어 있어 이산의 아픔 치유에서는 소외

▶ 또한, 현재 이산가족상봉 신청자 128,000명 중 2,500명만이 일회성 상봉에 그쳤고, 국군포로 563명과 납북자 517명이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로 여전히 미귀환 상태

**약속**

▶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
- 선배 탈북민과 연계된 '멘토링 시스템' 구축과 창업지원센터의 권역별 설치 운영
- 북한취득 자격 인정제도 및 재교육 방안 마련

▶ 이산가족문제 및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법의 다각화 추진
-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추진 및 수시상봉, 서신왕래, 고향방문 등 다양한 방안 추진
-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상봉장 다양화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확인 → 서신교환 → 송환 등 단계적 해결방안을 강구

▶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해 알권리 향상을 지원
- 한류 영상물과 예술작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지원



13 미래를 잇다! | 든든한 안보 · 당당한 외교

#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외국 방문 지원

**현재**

▶ 해외 출국 국민 매해 증가 (2015년 19,310,430명 / 2016년 22,383,190명 / 2017년 26,496,447명)

▶ 국민 해외방문시 외교공관의 비협조 호소 등 재외국민 보호 수요 증가

**약속**

▶ 시·군·구청에 외국에 나가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24시간 비상전화 운용

▶ 시·군·구청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외국의 지역과 MOU를 통해 자매결연을 맺어 여러 가지 혜택 부여

▶ 자매결연 체결 외국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방문하게 하여 관광 수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국가개혁, 다음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약속입니다.

- 자녀세대 세금폭탄 방지법 제정
- 국민 건강 위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 포털사이트 정상화 위한 '드루킹 방지법' 추진
- 공정한 방송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
-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사회주의식 기업경영간섭 저지
- 좌편향 사회주의 역사교과서 퇴출
-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권력형 갑질 근절
-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민주권 강화
- 국선전담변호인 선임권을 국민에게



01 미래를 잇다! | 국가개혁

## 자녀세대 세금폭탄 방지법 제정

**현재**

▶ **공무원 증원,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확대로 정부의 경직성 경비 증가, 적자국채 발행 지속,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급증 등 향후 재정건전성은 악화 일로**

- 특히,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복지수요 급증,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실업 증가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까지 감안한다면 국가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될 우려

**약속**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재정준칙(채무 및 수지준칙) 도입,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안전판 기능 강화

▶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도입 시 장기적인 재정영향 등을 평가·분석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자녀세대 세금폭탄 방지법(재정건전화법안)(제)」**

02 미래를 잇다! | 국가개혁

# 국민 건강 위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현재**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케어는 재원마련에 건강보험 적립금(21조 중 11조) 활용, 국고지원금,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예고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파탄 우려

*소요재정 : 5년간 30조 6천억 추정

▶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막을 중장기 재정추계를 야당에서 줄곧 요구하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안 없음

**약속**

▶ 건강보험 적립금 총액의 5% 이상 사용시 사전 국회 동의 의무화

▶ 건강보험 적립금 기금화하여 보험의 책임성 확립

▶ 「국민건강보험법(개)」



03 미래를 잇다! | 국가개혁

# 포털사이트 정상화 위한 '드루킹 방지법' 추진

**현재**

▶ 우리 국민 60%가 포털 검색 서비스로 뉴스를 접하고 특히 네이버는 포털서비스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우리사회 검색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디지털뉴스리포트 2016, 한국)

- 수백대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수천개의 아이디를 조작하며 벌인 댓글 여론 공작 범죄인 드루킹 사건은 사실상 네이버가 묵인 · 방조 했다는 의혹
- 매크로프로그램 조작 이외에도 인위적인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 작업 세력들이 무수히 잠재하고 있음

**약속**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제도개선 법제화

- 포털사이트 뉴스 클릭시 해당 언론사 아웃링크로 이동해 해당 언론사에서 댓글을 다는 시스템으로 개선
- 포털사이트 자체 댓글, 실시간 검색 기능 즉시 폐쇄

▶ 매크로 활동 금지 및 처벌 근거 개정안 통과 추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개)」

04 미래를 잇다! | 국가개혁

# 공정한 방송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

**현재**

▶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방송장악 완료
-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두 공영방송 (KBS, MBC) 사장 자리를 장악
- 방송장악에 의해 전직 대통령 '부관참시형' 보도와 함께 정권 찬양이 공중파 방송의 주를 이루고 있음

▶ '드루킹 게이트' 등 문재인 정권 핵심과 연결된 대형 비리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축소 보도

▶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리품' 으로 전락

**약속**

▶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선출시 이사진 2/3 이상 동의 필수)

▶ 2016년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야당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원안 그대로 통과



05 미래를 잇다! | 국가개혁

#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사회주의식 기업경영간섭 저지

**현재**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명분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목적에 남용되어 국민연금의 정부 거수기 전락 등 연금 사회주의 우려

▶ 전국민 강제 가입 제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잘못되어도 가입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 의결권 남용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한 상황

**약속**

▶ 국민연금의 사회주의식 기업 경영 간섭 제한
- 기금이 보유한 의결권 행사는 하되, 기금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 행사 못하도록 제한

▶ 「국민연금법(개)」

06 미래를 잇다! | 국가개혁

# 좌편향 사회주의 역사교과서 퇴출

현재

▶ **중·고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최종본 (2018. 5. 2 공개) 좌편향 사회주의 내용**

▶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대놓고 부정**

-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유엔 승인 사실 삭제
- 대한민국 수립을 '정부 수립' 으로 격하하고, 남북한에 두 개의 대등한 '정부' 가 들어 섰다고 주장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수립 부정
-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 부각,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을 순차적으로 표기해 통일정부 수립 과정이 실패한 것이 남한 때문인 것처럼 전제

▶ **[좌편향 역사관] 자유민주주의에서 ' 자유' 삭제, 북한 공산 전체주의 체제 포장**

- '자유민주주의' 에서 '자유' 삭제 → 北 '인민민주주의' 까지 포용할 여지
- 군사도발, 핵문제, 인권, 3대 세습 등 북한 실상 알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삭제
- 북한 체제 설명에 '3대 세습' 대신 '사회주의' 넣어 북한 체제 포장
- 일제시기 민족 운동에 '사회주의 운동' 추가 → 북한 '사회주의체제' 성립으로 자연스럽게 각인 의도

▶ **[산업화 역사 부정] 자랑스러운 산업화 역사 평가절하, 전임 대통령 공로 부정**

-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임을 부정
-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독재로 낙인하여 경제성장 견인 공로 부정
- 산업화 공은 지우고, 한국현대사 집필방향의 절반 가까이를 '민주화' 에 할애

약속

▶ **일선 학교 교과서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거치도록 관련 규정 개정**

07 미래를 잇다! | 국가개혁

#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권력형 갑질 근절

**현재**

▶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와 중복조사, 국세청의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등으로 공권력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

▶ 개인 및 기업의 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약속**

▶ 공정위 적법한 조사 절차 강화(전자정보 등의 증거능력 및 조사 절차 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에 관한 규칙의 법률 상향

▶ 특정 납세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서면 신고 의무화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중지 지시 요청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제)」, 「국세기본법(개)」



08 미래를 잇다! | 국가개혁

#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현재**

▶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소비자 피해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관련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 효과적인 법 위반행위 억지력 및 확실한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법제 도입

**약속**

▶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 소액 다수 피해가 큰 담합 행위,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등 위법행위 적용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개)」, 「소비자 기본법(개)」

09 미래를 잇다! | 국가개혁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민주권 강화

**현재**

▶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만연하여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발전이 더디어지는 바, 국민들의 정치개혁 민심을 받들어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특권으로 인식되는 '불체포 권한'과 '면책권한' 제한

▶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반면교사 삼아 '국회의원 황제외유 방지법' 추진

▶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참여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새로운 법적 틀 마련 필요

**약속**

▶ **국회의원 불체포 권한 폐지(헌법 제44조 삭제)**

▶ **국회의원 면책권한 제한(헌법 제45조 개정)**

▶ **'국회의원 황제외유 방지법'(「국회법(개)」 및 「인사청문회법(개)」) 추진**
- 국회의원 출장의 요건과 범위, 사후 예산내역 공개 및 감사 등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 마련
- 국회의원 해외출장 시 적절성 판단하는 제도 및 기구 신설
- 국회의원 출장 요건을 자기부담시키는 방안 마련
- 인사청문회 대상에 금감원장 포함

▶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하되, 악용 방지장치 마련 병행

10 미래를 잇다! | 국가개혁

# 국선전담변호인 선임권을 국민에게

**현재**

▶ 국선전담변호인 선임 권한이 법원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예속된 변호인의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독립된 법률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약속**

▶ 법률구조공단에 '국선전담변호인제도 운영위원회' (가칭) 설치・운영

- 민간 전문가(법학 교수, 변호사 등), 일반 국민(관련 시민단체, 자원자 등) 으로 구성하여 선임 업무 관련 시행규칙 등을 심의하고 제도개선책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법원이 갖는 국선변호인 배정 업무를 국민에게 환원

- 국선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변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고

▶ 「법률구조법(개)」, 「형사소송법(개)」, 「형사소송규칙(개)」, 「변호사법(개)」



진짜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 지방자치

#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이장·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및 법적지위 부여
-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 구현
-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으로 누구나 손쉽게 자원봉사 참여
- 인구감소지역 종합대책 추진

자유한국당

01 미래를 잇다! | 지방자치

## 이장·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및 법적지위 부여

**현재**

▶ 지방행정의 가장 일선에서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힘든 일을 도맡아 왔던 이장·통장들은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어 신분과 위상이 열악한 상황

▶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처우 개선 필요

**약속**

▶ 이장·통장의 업무수당 현실화(월 20만원 → 40만원)

▶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 추진

▶ 「지방자치법(개)」 또는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02 미래를 잇다! | 지방자치

#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 구현

**현재**

▶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 : 2 구조에 머물고 있고,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의 부담 가중

▶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재정 균형 장치 마련 필요

**약속**

▶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 : 2에서 6 : 4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추진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괄보조 형식으로 개편
-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 초과세입분의 20% 한도내에서 지방교부금 추가 지원

▶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 균형발전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역할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 「지방세법(개)」, 「지방교부세법(개)」, 「지방세기본법(개)」, 「지방세특례제한법(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 등



03 미래를 잇다! | 지방자치

#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현재**

▶ 1995년 민선자치 출범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앙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중은 32%에 불과하여 '3할 자치'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통용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필요

**약속**

▶ 중앙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 19개 중앙부처, 100개 법률 598개 사무 지방 일괄이양
-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이전

▶ 지방영향 평가제 도입
- 법령 제·개정 시에 지방분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지방일괄이양법(제)」, 「지방자치법(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

04 미래를 잇다! | 지방자치

#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현재**

▶ 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재정의 확충 등 자치단체의 확대된 자율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필요

**약속**

▶ 행정성과 공시제도 정례 시행
- 매년 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운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엄격하게 감시하여 자치단체의 권한 남용 방지

▶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요건 완화
-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완화,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기간 연장, 사전투표제 도입 등

▶ 「지방자치법(개)」, 「지방재정법(개)」, 「지방공기업법(개)」, 「주민투표법(개)」, 「주민소환법(개)」



05 미래를 잇다! | 지방자치

#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으로 누구나 손쉽게 자원봉사 참여

**현재**

▶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정부의 힘만으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

▶ 누구나 손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관이 공공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

**약속**

▶ 누구나 손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
- 스마트폰을 활용한 국민안전 위해요소 신고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원봉사로 인정

▶ 지역사회의 실정을 반영한 자율적인 자원봉사로 풀뿌리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특화된 자원봉사 추진계획 수립

▶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녹색어머니회 등 봉사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 지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 「도로교통법(개)」

06 미래를 잇다! | 지방자치

# 인구감소지역 종합대책 추진

**현재**

- 농·어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는 수십년 전 부터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인구절벽에 직면
-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228개의 시·군·구 중 84곳(37%), 3,482개의 읍·면·동 중 1,383곳(40%)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

**약속**

-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의 경쟁력 향상 및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우선적으로 추진
-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 확대
- 인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제)」



진짜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 개헌

# 대한민국의 더 큰 내일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개헌 추진

자유한국당

01 미래를 잇다! | 개헌

##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개헌 추진

**현재**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근절하고, 정부와 의회가 상생의 협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형태 절실.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책임총리에 분산시켜 대통령은 외치, 책임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권력구조 논의 필요

▶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수도 기능의 일부 분산 필요

**약속**

▶ 분권형 대통령 - 책임총리제 개헌
- 헌법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 개정 및 신설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임기 및 권한을 재설정하여 분권형 정부형태 구축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 신설 : 세종시 행정수도 규정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

▶ 여야 단일개정개헌안 마련 후 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로 개헌 완성(9~10월)